

언론중재

2013 여름호 통권 127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인쇄 2013년 6월 25일
발행 2013년 6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00002
발행인 권 성
편집인 오광건
인쇄인 이만성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 397-3114
FAX 02) 397-3069
www.pac.or.kr
편집·인쇄 (주)성우애드컴

편집위원

손영준 서울제3중재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변호사)
강선임 외부위원
(AnC 미디어 실장)
송상근 외부위원
(동아일보 교육복지부장)

- * 본지는 집자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

2013 여름호 통권 127호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 O N T E N T S

계간 언론중재

Vol. 127 Summer 2013



06

Focus on World Media

- 06 보스턴 테러사건 보도 분석 _이만규
- 12 진짜 중군 기자 _박유리

칼럼

- 22 익명 저널리즘, 걸리면 다 죽는다 _양선희

사건, 그 후

- 24 기사 표절에 관대한 한국 _남형두
- 32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대사관 망명' 1년 _이순녀



32

교육현장 스케치

- 40 중·한 인터넷 민족주의의 실태와 언론의 역할 _저우위보

판례토크

- 44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_이영진

Movie with Legal Mind

- 50 저항권, 법과 권력이 결교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
;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보고 _양려원



76

조정중재 현장

56 페리안드로스를 꿈꾸며 _황덕남

기고문

60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보는
언론사의 향후 과제 _우병현

76 연예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_남재일



88

해외통신원 기고

88 변화되고 있는 중국 언론의 북한 보도
_온기홍

언론분쟁 노트

94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반론·정정보도에
인색하지 않아야 _권태우

보스턴 테러사건 보도 분석 : 한국과 미국, 영국 신문 1면을 중심으로



글. 이만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

“테러는 희생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언론의 노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테러사건이 서방 세계에서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 없다.”(Raymond Tanter,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



시작하면서 :

테러와 언론보도

“테러는 미디어를 먹고 산다”는 말과 같이 테러와 언론은 숙명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테러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행위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불평을 일탈적으로 표출하는 범죄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폭력적인 이벤트를 자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도하는 공개적인 논쟁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다.

더욱이 혁명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한 지역의 테러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뉴스보도를 통해서 테러범들의 목적이 손쉽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테러범은 언론이 테러와 시민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고, 그들의 테러행위가 잔인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수록 언론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인 월터 래커(Walter Laqueur)는 냉소적으로 “언론은 테러범들의 최고의 친구이고, 테러범들은 우리 시대 최고의 연예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보도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 영국신문의 테러보도 형식 비교와 앞으로 재난보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스턴 테러보도 : 용의자 오보

보스턴 테러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12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첫 테러인데다, 범행 현장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컸다.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난 4월 15일 오후부터 미국 언론은 특보 체제를 가동했다. 언론사들의 치열한 속보 경쟁에 따라 예상치 않은 많은 오보를 양산했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선정적인 보도로 유명한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가장 먼저 검은색 배낭을 멘 청년과 대화하는 모로코 출신 고교생 육상선수 술라하딘 바룸(Sulahaddin Barhoum)을 용의자로 단정한 사진과 기사를 18일자 타블로이드판 1면에 크게 실었다.



〈그림 1〉 뉴욕포스트 1면 테러 용의자 오보

뉴욕 마라톤 출전에 앞서 보스턴 마라톤을 참관하러 갔던 바룸에겐 수백 통의 비난 섞인 협박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심지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그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신분을 증명하기도 했다. 18일 오후 수사당국이 “언론들의 추측 보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진을 공개한다”면서 진짜 용의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로도 바름을 향한 ‘마녀사냥’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속보 경쟁에 눈이 먼 언론사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직후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뛴 남자, ‘용의자는 검은 피부의 남성’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테러 당일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가 잡혔다. 용의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라는 언론사 오보가 난무했다. 낙종이 두려운 언론사들이 경쟁사의 ‘확인되지 않은 1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되어 갔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언론사들도 미국 현지의 오보를 생각 없이 받아쓰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16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는 테러 현장 부근에서 검은색 배낭이나 가방을 지녔던 남자”라며 시민들의 제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자 ‘레딧(Reddit)’, ‘포찬(4chan)’ 등 소셜 뉴스 공유사이트에선 용의자 사냥이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4월 15일 실종된 브라운대 학생 서닐 트리파시(Sunil Tripathi)가 도마에 올랐다. 트리파시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분석한 레딧은 당국이 지목한 두 번째 용의자가 바로 트리파시라고 보도했다. 지방 방송사도 그가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며 앞다퉈 이 소식을 퍼 날랐지만, 4월 23일 그로 추정되는 대학생의 사체가 브라운 대학교 근처 강가에서 발견됐다. 그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

던 가족은 테러범 오명에 사망 소식까지 겹치면서 두 번 슬퍼했다. 레딧에서 보스턴 테러 용의자 수색을 자처한 네티즌 수사대는 용의자가 밝혀지자 트리파시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CNN 등 여러 유수 언론들이 속보 경쟁으로 오보를 양산할 때 오직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만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뉴욕타임스는 사실 보도 원칙에 따라 보스턴 테러에 관한 속보를 내보내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은 오보를 막는 일에 집중했다. 첫 여성 편집국장 질 에이브럼슨(Jill Abramson)은 보스턴 테러 발생 이후 꼬박 3일을 회사에서 보내며 속보와 오보와의 전쟁을 치렀다. 그녀는 이번 미국 언론의 오보 행렬을 두고 “‘부정확성의 루비콘 강을 건넌 듯하다. 지난 한 주는 저널리즘에 최고이자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한 컨퍼런스에서 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 태도는 아무리 다른 언론이 보도해도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인내의 용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스턴 테러 관련 미국 언론의 오보 사태에 대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상이며 점점 인터넷 보도매체의 증가와 소셜 미디어 확산, 그리고 언론사 경영난이 부른 또 다른 내부참사라고 미국 언론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미·영 신문의 보스턴 테러보도 비교

지구촌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미국 보스턴 테러사건은 여러 국가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그 보도는 다양한 문화와 관습,





〈그림 2〉 세계일보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정치 프리즘을 통해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프레임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보스턴 테러 관련 신문 1면을 분석해 보면, 한국 언론의 테러보도의 특성은 피해자 중심의 선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의 테러 관련 발표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피해자를 조명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일보 1면 테러보도는 사람중심, 현장 중심에 맞추고 있다. 현장과 피해자 중심에 테러보도를 맞추다 보니 선정성을 피할 수 없다.



〈그림 3〉 서울신문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4월 17일자 한국 중앙일간지 1면 헤드라인을 분석해 보면 '또 테러패닉'(세계일보), '뒤흔친, 악몽'(서울신문), '뒤흔치다'(한국일보), '공포 재연'(경향신문), '또, 당했다'(국민일보), '공격당했다'(조선일보), '경악'(중앙일보) 등 다분히 선정적인 단어를 남발했다. 또한 〈그림 3〉과 같

이 한국 언론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절규하는 처참한 장면을 여과 없이 1면에 게재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보스턴 테러보도 1면 헤드라인을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발 발생 3명 죽고 100명 사상자 발생 : 결승점에서 혼란 (Blasts at Boston Marathon Kill 3 and Injure 100: Panic at finish line)"으로 사실 중심의 차분한 보도를 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뉴욕타임스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테러' 관련 용어나 최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 단어를 배제하고 사건이 발생한 사실과 그 결과에 방점을 두고 보도했다. "두 번의 폭발이 마라톤 도시를 강타함에 따라 보스턴은 테러를 당했다(Terror in Boston as twin blasts hit city marathon)"고 전한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신문 제목에서도 감정적인 흔들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선정적인 한국 신문 사진과 달리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은 피해자 구조와 피해복구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면과 테러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

는 모습을 1면 사진에 게재하고 있었다(〈그림 4, 5〉 참조).



〈그림 5〉 영국 가디언 보스턴 테러 1면 보도

이처럼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의 중앙일간지들은 선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재난보도의 큰 원칙은 정확한 보도와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핵심이다. 테러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현상을 보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실관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재난보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관한 행동요령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제시한 재난 보도 준칙(2003년)은 다음과 같다.

– 재난의 예방과 대응보도에 주력해야 한다.

- 재난의 유형과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한다.
- 피해구호 활동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위험 지역과 시간을 피하고 장비를 갖추는 등 취재기자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물론 테러와 같이 재난을 많이 경험한 미국 방송협회(RTDNA: 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Associ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러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2000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 테러범의 협박을 집중 보도하는 것은 향후 유사 테러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테러범의 체포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향후 유사 범죄를 감소시킬 효과가 크다.
- 테러범의 위협을 반복 보도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과 같이 진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테러 예방행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은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 ‘혼돈’, ‘경악’, ‘테러’, ‘대혼란’과 같은 용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다분히 주관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들

이다.

- 사실만을 보도하고 예고와 헤드라인과 그래픽을 가능한 차분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편집국의 통제가 어려운 현장보도를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 사실보다는 과정에 더욱 취재력을 집중시켜라.
- 취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라.
- 취재하기에 앞서 구성원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해라.

이러한 국내외 언론단체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앞으로 한국 언론은 제3자적 자세로 재난과 관련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태도로 사건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인지 및 실천노력 절실

1812년 영국이 백악관을 전소시켰던 사건,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3번째로 받은 보스턴 테러 본토공격은 자살 공격뿐만 아니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생생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테러 영상과 관련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 불안감과 같은 테러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을 가중시켰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미디

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폭력적인 메시지는 분명 테러범들이 노리는 것이다.

과연 미디어는 테러범들의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테러 행위는 주요 뉴스거리이며 당연히 보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테러보도의 강도와 정제된 내용이다.

“테러는 희생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언론의 노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서방세계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테러사건이 서방 세계에서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 없다.”(Raymond Tanter,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

결과적으로 테러 행위에 대한 보도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테러 행위에 대한 보도를 언론이 무시하거나 보도하지 않으면 과연 테러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한 저널리즘 분야에서 언론 기관에 의한 자기 검열이 과연 좋은 생각인가, 그리고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회의적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테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준수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짜 종군 기자

불잡히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자기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시리아 남자를 보고서야 살았다는 걸 느꼈어.

내 등에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카메라 가방이 있었어.

- 프리랜서 사진기자 부아쟁이 사망 4일 전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서 -



글. 박유리
국민일보 국제부 기자



올리비아 부아쟁(Olivier Voisin)

프랑스 국적의 프리랜서 사진기자 올리비아 부아쟁(38, 이하 '부아쟁'). 그는 한국 입양아다.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던 부아쟁은 지난 2월 24일 이드립(Idlib) 지역에서 머리와 팔에 포탄 파편을 맞고 사망했다.

지난해 여름 시리아 알레포(Aleppo, 시리아 제2의 도시)에 잠입, 전쟁의 참상을 찍은 그는 이듬해 2월 다시 시리아 북부 하마(Hama)로 향했다. 부아쟁은 전쟁과 재난이 발생한 리비아, 소말리아, 케냐, 아이티 등에서 취재한

프로 사진 작가였고 그의 사진은 프랑스와 영국 주요 언론사에 실렸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이탈리아인 친구 미모사 마르티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신이여, 다른 사람이 거절한 것을 제게 주십시오. 고통과 전투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내일 저의 용기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망 4일 전 친구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끝냈다.

부아쟁의 편지

“결국 도착했어! 터키 당국이 국경 통과를 거부해 다시 한번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국경 가까운 곳에 보호서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서야 아무도 없는 땅, 지뢰밭을 지날 수 있었어. 그 리곤 감시탑 몰래 2km에 달하는 강바닥을 건넜지. 붙잡히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저기 멀리서 나를 기다리는 시리아 남자를 보고서야 살았다는 걸 느꼈어. 내 등에는 천군만군처럼 느껴지는 카메라 가방이 있었어.

그들은 나를 차에 태우고 두 시간쯤 달려 시리아 하마에 데려 갔어. 사람들은 나를 환대했고 강을 건넜다는 데 감동 받았어.

그날 먼 곳에서 대포 소리를 들었어. 정부군 부대가 하마의 북쪽을 차지하고 반군과 정부군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해주려군.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점령지를 지키려고 폭격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나빠서 그랬는지 공습은 멈췄어. 생활환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 오직 유일하게 좋은 뉴스는 살이 썩을 것 같다는 것뿐이야. 남앞에 물줄을 보려면 사위를 열 번은 헤야겠지만.

오늘은 집을 잃은 몇몇 가족들을 만났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지하나 동굴에 살아. 열악한 생활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이들을 만나곤 바뀌었어. 사진을 몇 장 찍었지만 AFP통신에서 받아 줄지는 모르겠어.

오늘 저녁은 무척 추워. 다행히 터키에서 산 여성용 타이즈가 있었어. 그걸 개입으니 겹칠 만했지. 사격은 20분간 지속됐고 지반이 흔들렸어. 소리가 무척 커서 반경 20km는 들릴 정도니까.

반군 대장이 점심때 양한 마리와 담배 몇 갑을 가지고 왔고 사람들은 가까운 숲에 들어가 장작을 땀어. 대장이 밤에는 모두 기도하게 했어. 반군 중에는 무척 어린 친구도 있어. 그들은 벌써 동료 20명을 잃었어. 어떤 사람들은 다쳤대. 나는 주로 여기서 아부 지마드란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는 한쪽 눈을 잃었어. 그래도 수제 로켓을 만들 정도로 똑똑해. 그는 남을 돕고 나무를 자르고 담배를 구는 등 모든 일을 해. 나는 평편없는 아랍어 실력으로 그에게 말을 붙이고 있어. 결국 이야기가 종교 쪽으로 흘러갔는데 자신이 살라피스트(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더라.

지난 여름 알레포 전투와 비교해 보면, 이번 전투는 그렇게 극심한 것 같지는 않아. 알레포 전투는 더 격렬했거든. 세계 2차 대전 때 파괴된 스탈린그라드 이후 최악의 도시가 알레포라고 하려군. 비록 경험 많은 사진 기자 동료 몇몇이 러시아와 체첸 전쟁에 비해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반군 사령관은 내게 프랑스군이 언제 군사적 도움을 줄지 물었어. 나는 전혀 모르는데 말이야! 시리아 내전이 벌어진 지 2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부끄러웠어. 그는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말하려군. 서방이 왜 개입을 두려워하는지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난 사실 별로 대담하고 싶지 않았어. 서방은 교란을 유일한 책으로 여기는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할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야. 나는 AFP가 원하는 것을 할 뿐이야.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벌어들인 것도 없지.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사가 원하는 사진 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 맞아, 벌어들여. 나는 사진을 찍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살아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 어떤 약도 그만큼의 생기를 주진 못할 거야. 이 밤은 여기 도착한 지 3일째야. 늘 그렇듯 바보 같이 책을 가져오는 걸 잊었어. 그래서 오늘 밤 할 것이 없어. 인터넷은 없고 대화도 제한돼 있어. 내가 바보처럼 느껴져.

대다수 군인들은 무척 친절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걸 즐거워 해. 파리와 프랑스에 대해 1,000번



꿈은 물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동양인인 내가 어떻게 프랑스어를 구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는 한국인이고, 아빠는 프랑스인이라고 말해 줬어. 이런 질문을 받는 것도 처음은 아니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일할 때마다 아무리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해줘도 사람들은 날 중국인으로 봐.

나는 군인들이 프랑스 파리를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할 때마다 힘들어.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은(사실 노르북에도 파리 사진은 없어) 현실에 충실하고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기 위해서야.

술 한 잔 하는 것도 도움은 돼. 신이 풍류한 분이라면, 다음 전쟁은 아랍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게 될 거야. 적어도 나는 여자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포르노 사진을 갖고 있는지 묻더라. 이런 재밌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해.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서도 그들은 그런 사진을 갖지 못할 거니까. 바보 같고 종교적인 도덕주의자들 덕분에.

폭력은 심해지고 있어. 증오는 강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증오심을 그토록 강하게 느끼며 죽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는 걸까? 나는 시리아 홈스(Homs) 지역 주민들이 정부군에게 마구 두드러맞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 그렇게 폭력적이고 도처에 피가 낭자한 걸 본 적이 없어.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울어댔어. 정부군은 그들을 계속 차대지. 막대로 피가 나도록 때렸어. 형편없는 세상이야. 만약 이러한 폭력이 어느 날 목격자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판사를 마구 강하게 될 거야. 서방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신의 재판'을 믿는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 폭력이 언젠간 끝나겠지. 나중이 있다면 말이야. 기독교 문화에서는 화해가 무척 중요하잖아.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기독교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선 공산주의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했어. 비교는 여기서 끝낼게.

로제 수사(천주교 수도자)는 '신뢰의 순례'를 통해 화해를 말했어(로제는 2차 대전 가운데 신뢰, 나눔, 화해를 실천할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프랑스를 여행하다 폐제 마을에 정착했다). 이 가르침은 나와 친구들에게 감명을 주었어. 그리고 난 화해를 믿어.

마음에 갖가지 뻔민이 들 때 2차 대전 당시 리비아에서 사망한 프랑스 군인의 기도가 떠올라. '신이며, 다른 사람들이 거절한 것들을 제게 주십시오. 고통과 전후를 주십시오. 오늘 밤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내일 저의 용기가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씀-

시리아 전쟁으로 사망한 언론인 최대 100명

조금은 두서없이 쓰인 부아쟁의 편지에는 사진 기자로서의 사명감, 전쟁과 학살에 대한 분노, 밥벌이의 서글픔이 묻어난다. 포르노 사진을 요구하는 반군 등 그가 묘사한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 솔직하다. 그의 죽음은 언론인에게 진실하고 조용한 울림을 남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이 세계 언론자유 날인 5월 3일 발표한 언론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년간의 시리아 전쟁으로 숨진 언론인은 44~100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큰 것은 아마도 언론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장악된 시리아의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지 오래고, 수많은 시리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살과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따라서 숨진 언론인 통계 중에는 시민 기자, 프리랜서 기자, 언론사 소속 기자 등이 혼재돼 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우리 언론의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동아시아 언론 중에는 그나마 일본 언론이 시리아 사태 취재에 적극적이다. 일본 프레스TV는 지난해 여성 중군 기지를 파견하기도 했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최소 8만 명이 사망한 걸 감안하면 우리 언론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치가 이 정도일 만큼 학살은 심각하다.

국내 언론사 한곳이 지난해 8월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잠깐 취재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중군 기지를 보낸 언론사는 한 곳도 없었다. 대다수 취재는 인접국을 떠도는 난민에 국한됐다.



부아쟁이 촬영한 알레포의 어린이들



부아쟁이 촬영한 시리아 반군들

시리아가 다른 어떤 분쟁보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점, 국내 미수교국인 시리아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요인도 이유로 꼽힌다.

이런 저조한 관심은 미군이나 다국적군이 시리아전에 개입하지 않은 탓도 있다. 서방 세계 중심으로 뉴스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 국제 뉴스의 현실이다. 국제부원들끼리 밥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뉴스 안 나지만 어떤 나라 사람은 조금만 죽어도 뉴스 되잖아. 목숨 값 가지고 나라마다 순위 매겨도 기사 될 거야.” 전쟁에서도 비싼 목숨 값의 외국 군인들이 개입하는지 여부가 뉴스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뉴스 가치가 과연 맞느냐에 대해선 논의가 이어져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뉴스 가치가 그렇게 고착화됐다는 얘기가.



시리아 사태에 관한 한국 언론의 미비한 관심은 2003년 이라크전, 2001년부터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전과도 비교된다. 당시 여력이 되는 국내 언론사들은 현장에 특파원을 보냈고, 많은 기자들이 ‘임베드 프로그램’으로 전쟁을 취재했다. 미국 국방부가 마련한 임베드 프로그램은 기자가 부대에 배속돼 취재하는 것으로 안전한 취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UPI통신이 2003년 7월 이라크전의 임베드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한 기사를 보면, 많은 기자들이 객관성에 적신호를 느꼈다. CNN의 밥 프랜켄 기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기자들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현상(Stockholm Syndrome, 편집자 주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인 현상)이 있었고 군부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상당한 유혹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반면 임베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재한 영국 BBC의 존 심프슨 기자는 “한쪽에 제한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자 취재를 강조했다.

이라크 전쟁 10주년을 맞은 지난 3월 20일 미국 언론들은 반성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다. 포린폴리시(FP)는 지난해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열 가지 교훈’이라는 기사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미국에 득이 없는 전쟁이었다. 후세인이 숨겨놨다던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동 전역은 물론 세계에서 반미 감정을 불러왔으며,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미군의 명분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이라크전을 분석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알레포 시가지(출처 : Reuters)



시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아자즈(Azaz)의 모습

당시 임베드에 참가했던 약 500명의 기자들은 10년 후 이라크전이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 군부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유혹 가운데 얼마나 균형 잡힌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들의 용기

나는 지난해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실상의 임시정부였던 시리아국가위원회(Syrian National Council)를 취재했다. 한국 언론으로선 최초였다. 당시 2주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리아인들의 민주화 의지와 노력을 5회 전





시리아국가위원회 조지 사브라 임시 의장이 2012년 11월 21일 두바이에서 열린 'the Partnership To Invest In Future Syria'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출처: The National)

면 시리즈로 내보냈다. 이 단체는 올해 시리아 국가연합(Syrian National Coalition)으로 확대됐고, 카타르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UN총회는 5월 15일 반정부 단체인 시리아국가연합을 '정치적 전환기에 필요한 효율적 대화 상대'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로이터 통신(Reuters) 등 많은 해외 언론이 지난해 시리아 내전에 종군 기자를 파견했는데 시리아인들의 외교적 노력과 민주주의로의 전환 움직임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은 반군과 야권 정치인으로 나뉘는데 당시 반군만이 주로 보도됐을 뿐이다. 외신과 차별화된 보도, 필요하지만 취재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자로서의 의무감과 호기심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시리아 내부에 들어가서도 독자적 취재보다는 해외 언론에 의존하거나 전쟁 언저리밖에 취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

었다. '한국 언론인, 분쟁 지역 입성'이라는 타이틀과 사진만으로 기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을뿐더러 실상은 외신에 다 나오는 내용을 현장 기사라고 내놓고 싶지 않다는 점도 있었다.

사실 종군 기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있었다. 위험한 만큼 빛이 나는 기자로서의 명예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겠냐는 편견이었다. 그러나 한국 입양아 출신의 프랑스 사진기자 부아쟁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현장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그들의 소명의식과 사진에 미쳐 있다는 열정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한국 기자, 시리아 격전지 입성' 이런 타이틀뿐인 보도일지라도 그 또한 나름 제한된 가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뒤늦게 든다.

종군 기자에 대한 존경을 갖게 해 준 레바논의 동료가 한 명 있다. 지난해 가을 이스탄불, 올해 봄 레바논 취재 과정에서 두 차례 접촉한 오마르 하리쿠스(43) 기자다. 레바논 언론사 알무스따끄발(Al Mustaqbal)의 국내 정치부에 속한 하리쿠스 기자는 전쟁 중에 세 차례 시리아에 들어갔다(레바논과 시리아는 여권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레바논이 시리아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 때문에 국내 정치부 기자가 시리아 뉴스까지 커버한다). 하리쿠스 기자는 자신의 위험한 취재활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두렵지만 그게 나의 일이니까." 기자가 취재하는 데 무슨 이유가 더 있겠냐는 뜻이었다.

시리아의 홈스(Homs), 바바아므르(Baba Amr), 다마스쿠스(Damascus) 등을 취재한 그는 무서워서 처음에는 하루 만에 돌아온 적

도 있다고 한다. 정부군이 산에 주둔하면 그
는 밤에 이동했고, 총 소리가 들리고 탱크 불빛
이 지나다닐 때는 죽을 것 같은 감정도 들었다
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스탄불에 체류할 때 하리쿠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고, 올해 4월 난민촌
방문차 레바논에 갔을 때 그를 직접 만났다. 마
침 하리쿠스 기자가 이집트 취재를 마치고 레
바논으로 돌아온 시점이었기에 만남이 가능했
다. 이슬람 시아파 출신인 그는 특이하게도 수
니파 쪽 언론사에서 일했다. 레바논 시아파는
이스라엘에 대항한 범이슬람주의, 수니파는
레바논 고유의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학생 운동
당시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이 시아파보다는 수
니파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종파 갈등이 심각
한 레바논에서 자신의 종파와 다른 선택을 하
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그는 이 때
문에 시내 한복판에서 두드려 맞고 병원에 입
원하기도 했다.

하리쿠스 기자는 또 다양한 종파 기자들이
설립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에도 속해 있었다.
레바논은 종파별로 언론사가 나뉘어져 객관
적 보도에 어려움을 겪는데 현실적인 여건 내
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보였다.

수시로 테러가 발생하는 전쟁터 같은 레바논
에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장애인인 된 여기자
도 있다. 국제여성언론재단(IWMF)이 해마다
세계 각 지역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활약한 여
기자들에게 수여하는 ‘용기 있는 언론인상’을
2006년 수상한 메이 시디악(50). 그녀는 레바
논 LBC TV의 정치토크쇼 진행자였던 2003년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al-mustaqbil' (المستقبل) with a header featuring the site's name and logo.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and a large image of a protest or conflict scene.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several news articles with text and images.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links. The page is in Arabic and appears to be a news portal.

레바논 언론사 알 무스따قب알 홈페이지

9월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폭탄이 터져 왼
쪽 팔과 다리를 잃었다. 수십 년간 내전과 다른
나라의 분쟁에 휘말렸던 레바논에서 그는 내전
간섭을 하는 시리아를 비판했다. 그녀는 소신
있는 발언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

레바논 출장 당시 시디악을 만나진 못했지만
그녀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뒤늦게 메시
지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인터넷으
로 늦은 답장을 보내왔다.

“나는 고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주적
이 되는 것을 꿈꿉니다. 나라를 위해 팔과 다리

를 잃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백 번 그보다 더 수백 번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I realized my dream for free independent sovereign homeland, I do not regret losing an arm and a leg for my country. It was the least I can give and will give a hundred times more a hundred more times when it is necessary).”

‘진짜’ 종군 기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종군 기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사실 앞뒤가 안 맞기도 하지만 나는 전쟁을 한두 차례 취재했다고 종군 기자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독자적 취재가 가능한 전문성, 진실을 추구하는 시각의 균형성이 종군 기자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 등에서 일해 온 크리스 헤지스 기자는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발칸반도 등 12개 지역에서 분쟁을 보도했다. 죽음의 위기도 수차례 넘겼다. 중남미 비포장도로에서 매복에 당하기도 하고, 이라크에서는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세르비아군 저격수에게 저격을 당했고, 사라예보에서는 하루 천 번의 폭격을 경험하기도 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분쟁 지역에서 일했다.

“총에 맞았을 때, 거칠게 말해서 그건 폭발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주위에서 큰 총소리가 들리고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스치

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고통은 없는, 마치 전기 단자를 쥐었을 때 같은 격렬한 충격을 느꼈다. 완전하게 약해지는 느낌이었고, 무엇인가로부터 얻어맞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번개에 맞으면 아마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한다. 나는 즉각적으로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1초 안에 일어난 일이다. 다음 순간 무릎이 꿇이면서 쓰러졌고 큰 소리를 내며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데, 다행스럽게 머리를 다치지지는 않았다. 나는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었고 멍한 기분에 휩싸였는데,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자각은 있었지만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헤지스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 52쪽)

헤지스는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에서 조지 오웰(1936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작가)의 설명을 빌려 총에 맞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한다. 전반적인 책 내용은 전쟁 그 자체에 관한 400여 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됐다. 수식으로 꾸민 미문도 없고 형용사도 최대한 자제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먹고, 씻고, 볼 일을 보는지, 생존에 집중한 책이다. 일종의 전쟁 매뉴얼이다. 이 책은 그러면서도 전쟁의 폭력성, 그 속에서 파괴되는 인간을 말한다.

“전투 중 사람을 죽일 때 아마 몇 번의 감정적인 반응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감정들은 보통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이 얼어붙고 방아쇠를 당

길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살인의 단계인데, 훈련의 결과 반사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다. 살인은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는데, 반복되는 살인은 '살인 중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중간 정도의 거리나 원거리에서 사격할 때 특히 강해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양심의 가책과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는 단계인데, 다시는 적을 사살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데이브 그로스먼은 이것을 '고통과 공포의 콜라주'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경험은 감정의 격변과 혐오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 총을 놓고 울었다. 피가 흥건했다. 나는 토했고 울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부끄러웠다. 나는 미안해라고 바보처럼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저 다시 토했다.' 많은 병사들이 전투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감정을 거부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단계를 거친 이후의 살인은 더 쉬워진다.'(헤지스 저서 '당신도 전쟁을 알아야 한다' 98쪽)

종군 기자의 요건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용기에 그쳐서도 진짜 종군 기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 속의 인간,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반응하는 인간의 양상, 인간이 만들어내는 학살과 폭력, 이런 것들을 보고, 본 대로 보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쟁을 홍보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면, 학살을 목격한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면 진짜 종군 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에 한 번 참여하지 않은 기자가 말이 너무 길었다.



익명 저널리즘, 걸리면 다 죽는다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몇 년 전엔 '미네르바 사건'과 '타진요' 때문에 시끄러웠다. 미네르바는 한 때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통했던 익명의 경제논객이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민감한 경제현안을 예언하고,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뿐 아니었다. 당시 그의 예언 한마디에 증권시장이 움직였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추적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는 무죄. 하지만 그가 30대의 전문대 출신 무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망한 네티즌들 사이엔 '조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음모론이 불붙기도 했다.

정보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저널리즘은 과거엔 매체와 필자가 분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장 이후엔 필자가 모호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선동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명 '익명 저널리즘'이라 할 만한 현상이다.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정보와 날조된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키는 위험한 상황도 생겼다. 바로 이런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미네르바 사건 말고도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있었다.

타진요는 거짓과 모함으로 점철된 여론몰이로, 시쳇말로 하자면 '익명 저널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스탠포드대 출신이라는 가수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한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해 회원만 10만여 명으로 불려나가며 각종 음모론과 모함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문제 제기자의 신원도 감추고, 회원들 간에도 주로 익명으로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타블로라는 한 개인의 명예와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언론 매체들까지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타블로가 이 대학에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음모론은 이런 객관적 사실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거세게 저항했다. 거짓에 마음을 뺏긴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성과가 있었다면, 인터넷 마녀사냥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데 가장 큰 케이스를 제공했다는 정도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타진요 카페

이는 대중 스스로 소통의 통로이자 주체가 되는 '소통 혁명' 시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요즘 대중들은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신(新)매체를 통해 만인과 직접 소통한다. 유사 이래 전대미문의 시대다. 하지만 신(新)기술과 신(新)문명이 반드시 문화와 지적 수준의 발달을 이끄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줬다. 이들 신(新)매체는 익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익명 저널리즘'의 온상이

로 미네르바나 타진요 사건 등을 통해 이미 그 폐해와 혼란을 드러냈지만 이에 따른 학습효과는 다른 쪽에서 길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요즘 익명 저널리즘은 단순한 허위와 날조, 음모론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기초인 사실(Fact)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걸러지는 장치 없이 단편적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데서 오는 파괴력은 허위사실 유포나 음모론보다 치명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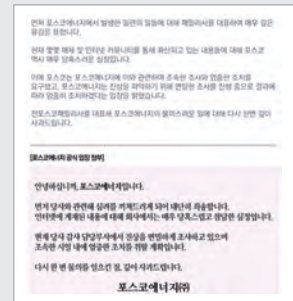
한 예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 한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에 탄 포스코 상무가 라면 때문에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쳤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 사건은 승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또 승무원의 경위서까지 유출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SNS·인터넷에서 즉각적인 네티즌의 심판이 이어졌고, 해당 상무와 그가 재직했던 포스코에까지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다. 물론 그의 행동은 비이성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가 치른 대가는 상상외로 컸다. 해당 상무는 회사에서 나갔고, 포스코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남양유업의 막말 영업직원 사건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는 3년 전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밀어내기하면서 전화를 통해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SNS를 통해 공개된 사건이다. 해당직원이 회사를 나간 것은 물론이고, 이후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매출 감소와 사회 비난 등의 위기에 섰고, 다른 대리점들도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등 타인의 피해도 만만찮게 늘고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SNS로 유포된 후 대중의 응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기존 매체들이 뒤따라 보도하고 함께 확산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전 아무도 그들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우리 사회

의 해묵은 문제인 '갑(甲) 횡포'에 대한 반감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면서 '갑을문화'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였다. 한데 폭풍처럼 불어온 문제제기에 모두가 허둥대는 게 사실이다. 다른 갑을관계가 폭로되고, 모든 대기업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된다. 이는 이성적 대화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갑은 나쁘다'는 식의 흑백론과 여론몰이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갑의 횡포를 제재하겠다는 각종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바람에 과잉입법 논란도 벌어진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과정을 통한 문제제기나 해결과정이 무질서하고 포퓰리즘적이라는 거다. 언론활동은 늘 대상이 있으므로 상대의 명예훼손과 인권문제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데 SNS 등을 통한 익명 저널리즘은 한 마디로 '걸리면 다 죽는다'는 시쳇말처럼 피해가 막심하다. 기존 매체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오보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익명 저널리즘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과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제받을 길이 모호하다. 이에 걸린 개인은 일상적인 삶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질 우려가 크다. 이전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익명의 '선동'에 대해선 경계하고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기사 표절에 관대한 한국



글.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절로 정직을 받은 새리 호르위츠에 관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출처: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 1) Paul Farhi, "Washington Post suspends reporter for plagiarizing stories on Tucson shooting", The Washington Post, March 16, 2011.
- 2) 다음은 표절당한 기사 : Michael Kiefer, "Feds' new indictment charges Loughner with 49 counts", The Arizona Republic, March 5, 2011; Dennis Wagner, "Details of Loughner's search warrant revealed contents of safe hint at his mind-set", The Arizona Republic, March 11, 2011.

폴리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27년 베테랑 기자, 새리 호르위츠(Sari Horwitz)는 2011년 애리조나 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애리조나 리퍼블릭(The Arizona Republic)'(이하 '리퍼블릭 지')의 기사를 표절한 혐의로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받았다.¹⁾ 베낀 기사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애리조나 주 출신 기퍼즈 연방하원의원 총격 사건의 피고인 로우너(Loughner)에 관한 기사 두 편이었다.²⁾ 호르위츠는 온라인판에 오른 리퍼블릭 지의 기사를 같은 날 잘라 붙이는 방식(cut and paste)으로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³⁾

필자가 직접 리퍼블릭 지와 워싱턴포스트의 각 두 편의 기사를 대조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사에서는 연방민권법(Federal civil-rights law)에 관한 두 개의 문장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였고, 압수수색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기사에서는 총 여덟 개의 문장이 거의 동일했다.⁴⁾



전 뉴욕타임스 기자 제이슨 블레어
(출처: AP Photo)

3) 다음은 표절 기사 : Sari Horwitz, "Federal grand jury in Tucson shooting indicts Loughner on 46 new charges", The Washington Post, March 5, 2011; "Court documents: Police found evidence of Loughner's obsession with Giffords", The Washington Post, March 11, 2011.

4) 한편, 표절 기사와 피표절 기사, 총 4 편의 기사는 그 문단(Paragraph)이 대부분 하나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기사에서 리퍼블릭 지는 22개의 문단, 워싱턴포스트는 24개의 문단으로, 두 번째 기사에서 리퍼블릭 지는 15개의 문단, 워싱턴포스트는 11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

5)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편집자 명의의 사과문이다. "Editor's Note: An Apology", The Washington Post, March 17, 2011.

6) 이상, Wikipedia의 'Jayson Blair' 중 'Plagiarism and Fabrication Scandal' 부분 참조.

표절 기사가 나간 후 표절 확인과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매우 신속했다. 리퍼블릭 지의 편집자는 워싱턴포스트의 편집국장에게 표절사실을 알렸고,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A2면에 편집자 명의로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표절로부터 사과까지 12일이 걸렸다.⁵⁾ 워싱턴포스트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신문이라 할 수 있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도 2003년 표절로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제이슨 블레어(Jayson Blair) 기자는 텍사스 현지를 취재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신문(San Antonio Express)이 인터뷰한 여성을 마치 자신이 인터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지방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표절로 인정돼 결국 사임했다.⁶⁾

호르위츠 기자가 표절한 리퍼블릭 지 기사는 기퍼즈 의원 총격범의 기소에 관한 기사와 총격범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기사였는데, 이들 기사는 기자의 특별한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 있지 않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 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칼럼과 같은 논평이나 해설기사와 달리 스트레이트 기사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이트 기사'도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작권침해와 표절을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목을 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들고 있다(제7조 제5호).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Copyright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따라서 표현(Expression)이 아닌 사상(Idea)은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표현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전제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의 표현이어야 하고, 그것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으면 되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한편,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여 다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경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된 경우,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 자칫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아이디어를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것으로 보아 이런 표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데, 이를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서 ‘스트레이트 기사’는 위 합체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이 합체의 원칙을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결과적으로 합체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다르다. 전문가 들조차도 이를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예를 볼 수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표절은 “일반 지식이 아닌 것으로서 타인의 독창적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의 것인 양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는 법적 책임, 표절은 윤리적 책임으로 구별된다는 것 정도는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핵심적인 차이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표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거나 저작권 보호대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도 독창적인 것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것도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흔히 타인의 아이디어는 가져다 써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저작권 영역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표절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상식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타 방송사에서 비슷하게 베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포맷은 일종의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가져다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절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방송윤리 위반으



로 제재할 수는 있다.

둘째, 표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Passing off)' 한 데 비난이 모아진다. 따라서 남의 것임을 밝힌다면, 즉 출처표시를 세세히 밝히면 표절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 위싱턴포스트 사건이 표절로 인정된 것은 바로 호르위츠 기자가 이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리퍼블릭 지를 출처로 밝혔더라면 표절 책임을 면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출처를 다 밝히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물론 '자기 것인 양' 한 것이 아니므로 표절 책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침해의 책임은 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으로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간혹 논문에서 출처표시를 꼼꼼히 달았으나 정작 자신의 글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침해에 해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신문기사에서도 선행 기사를 인용하되 너무 많이 인용하여 자신의 글이 거의 없다면 역시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는 단지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어야 할 것이다.

정직한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조사하고 목격자나 전문가를 면담하여 쓴 기사, 또는 폭넓은 취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기자보다 앞서 쓴 기사에 대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출처표시 없이 마구 가져다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바로 이곳이 표절금지 윤리가 기능하는 지점이다.

물론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학계의 학술저술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출처표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문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표시를 스스로 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대변인의 발표와 같이 뉴스가 특정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어떤 뉴스매체의 특종이거나 어떤 취재원이 특정 매체에게만 그 정보를 준 것이 분명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은 매체가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재판 또는 분쟁 중인 사실에 대

7) 이상, 언론이 출처표시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Jonathan Band and Matt Schruers, *Daster, Attribution, and Plagiarism*, 33 AIPLA Q. J. 1, 18-19 (2005) 참조.

8) 강남준·이종영·오지연, “신문기사의 표절 가능성 여부 판정에 관한 연구 : 컴퓨터를 활용한 형태소 매칭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학보*, 제52권 1호(2008. 2), 442면, 각주 3번 (원출처 : N. Lewis, *Paradigm disguise: Systematic influence on newspaper plagiaris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2007)).

한 보도의 경우 추후 기사작성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것을 피하기 위해 출처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견해를 밝힐 때에도 객관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출처로 제시하기도 한다.⁷⁾

그런데 위와 같이 기자들이 출처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문 기사나 칼럼 작성 시 타인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 그 출처를 대가란 쉽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다. 이는 작성자 탓이라기보다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신문기사(칼럼 포함)에서 일일이 출처를 밝히면 기사의 간결성을 해쳐 기사작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밝히지 않으면 표절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절을 면하여 기사를 쓰는 것을 아주 이상적이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성배(Holy Grail)’ 찾기에 비유하기도 한다.⁸⁾

사실 지면의 성격상 출처를 일일이 댈 수 없는 것이 언론매체의 특성이자 한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리낌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하려는 의도만 없다면 얼마든지 출처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학계에서와 같이 “Full reference”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에 따르면”이라든지, “...라고 말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작권침해는 법적인 영역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표절은 피해자가 피표절자(저작권자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의 발상자) 외에도 독자, 학계 등 동종 업계 종사자를 피해자군(群)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침해와 달리 표절은 피표절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절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 사건을 예로 들면, 호르위츠 기자로부터 표절당한 리퍼블릭 지나 그 소속 기자가 표절을 이유로 호르위츠를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워싱턴포스트는 호르위츠 기자에 대해 표절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호르위츠의 표절로 인한 피해자는 리퍼블릭 지와 그 소속 기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워싱턴포스트의 독자들은 그 기사를 호르위츠 기자가 직접 현장(Tucson)을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았을 텐데,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cut and paste’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독자를 속인 것으로서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저하시킨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자는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던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사과문
(출처: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Sign In](#) / [Register](#) / [Jobs](#) / [Real Estate](#) / [Rentals](#) / [Cars](#) / [Print Subscription](#) / [Today's Paper](#) / [Discussions](#) / [Going Out Guide](#) / [Personal Post](#) / [Videos](#)

[The Washington Post](#)
[Politics](#)
[Opinions](#)
[Local](#)
[Sports](#)
[National](#)
[World](#)
[Business](#)
[Tech](#)
[Lifestyle](#)
[Entertainment](#)
[Jobs](#)
[More](#)



[In the News](#)
[NSA](#)
[Tropical Storm Andrea](#)
[D-Day](#)
[Jeff Chiesa](#)
[Putin's divorce](#)

Editor's Note: An apology

Published: March 17, 2011

Two articles published by The Post online and in its print editions earlier this month contained substantial material that was borrowed and duplicated, without attribution, from The Arizona Republic.

The articles described an indictment of Jared Lee Loughner for murder and attempted murder in the January rampage that wounded Rep. Gabrielle Giffords and the subsequent unsealing supporting a search warrant in connection with the case.

In the article about the indictment, which [appeared on The Post's website](#) on March 4 and on page A3 of the print edition of March 5, two paragraphs about a provision in federal civil rights hate crimes were copied from the [Republic's work](#). The article also included without attribution other facts previously reported by the Republic.

The article detailing what investigators found in their search of Loughner's home, which [appeared online on March 10](#) and was published on page A3 in the newspaper of March 11, was an [article that appeared in The Republic](#). Ten of the article's 15 paragraphs were copied in whole or in part from an article that first appeared in the Republic.

It is The Post's policy that the use of material from other newspapers or sources must be properly attributed. The Post apologizes to the Arizona Republic and to its readers for this serious error.

© The Washington Post Company

또한 플리처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던 호르위츠 기자는 이와 같이 표절을 통해 손쉽게 기사를 써온 것이 사실이라면 어렵게 발품을 팔아가며(Legwork)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써온 대다수의 정직한 기자들(그들이 워싱턴포스트 소속이건 타사 소속이건)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표절 기사를 토대로 기자의 명성을 쌓아올리고 그로 인해 수상을 하며 승진이나 그밖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었다면, 이는 경쟁 신문사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다.



리거리스

9) 이 표는 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kpec.or.kr> 를 참조하여(2013. 5. 31. 방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체 규제 건수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위반 건수를,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 위반',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유위'으로 나누어 집계하여 만든 것이다.

끝으로 표절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윤리의 영역이다. 표절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윤리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문윤리강령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관련된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언론사와 언론인은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있는 출판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전제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 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자의 동의 아래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언론사와 언론인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위 실천요강에 의하면, 통신 기사나 타 언론사 보도, 타 출판물, 그 밖에 사진, 시청각물을 인용할 때, 출처표시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신문의 표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위원회의 기사 심의사업 실적으로서 규제에 관한 것이다.

〈표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사업 실적 2007~2012〉⁹⁾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신기사의 출처명시(8조 1항)	82	188	61	38	208	178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8조 2항)	356	134	49	21	69	122
타 출판물의 표절금지(8조 3항)	1				8	

10) 필자는 신문기사의 표절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자윤리의 회복을 역설한 적이 있다. 남형두, “기사 표절과 기자 윤리”, 한국일보 2010. 8. 5. 자 칼럼.

11) 뉴욕타임스는 2003. 5. 11. 자 1면 톱뉴스로 “Times Reporter Who Resigned Leaves Long Trail of Deception”이라는 제하의 전례 없이 긴 자체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 저작권 보호(8조 4항)	61	144	78	123	9	14
8조 소계	500	466	188	182	294	314
규제 총 건수	931	750	606	760	837	1,099
8조 위반 건수 / 규제 총 건수(%)	53.7	62.1	31.0	23.9	35.1	28.5

(‘8조 위반 건수 / 규제 총 건수’의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실적 가운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으로 인한 징계결정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도와 평론’,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편집 지침’, ‘명예와 신용존중’, ‘사생활 보호’, ‘어린이 보호’ 등 여러 가지 규제이유 중에서 표절과 관련된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으로 인한 규제 건수 비율이 낮게는 23.9%에서 53.7%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신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매체 전반의 표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¹⁰⁾

1년에도 수백 건의 기사 표절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둔감한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워싱턴포스트의 호르위츠 기자나 뉴욕타임스 블레어 기자 사건과 같이 기사 표절로 해당 신문사가 통렬히 반성하는 문화가 있다면, 해마다 표절 기사로 심의 징계 건수가 수백 건씩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출처표시를 달지 않음으로 인한 표절이 언론계에 난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 기사표절은 발각되기가 매우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관한 윤리의식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표절에 둔감하거나 서로 눈을 감아주는 잘못된 동류의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점에서 뉴욕타임스가 블레어 기자 표절사건 직후 편집국장을 해고하면서 이 스캔들을 뉴욕타임스 150년 역사의 가장 치욕적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1면 톱뉴스에 실었던 것¹¹⁾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표절에 관한 윤리 규정 위반이 잦아지게 되면,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신문매체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기사 표절에 관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대사관 망명’ 1년



글. 이순녀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2012년 8월 19일,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AP Photo)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42)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스웨덴으로의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이 스웨덴 송환에 불복하는 자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자 지난해 6월 19일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이후 필자가 이 글을 쓰는 5월 말 현재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

어산지는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결국 미국에 인도돼 기밀문서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미 진영인 에콰도르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두 달 뒤인 8월 16일 어산지의 망명을 허용했다. 영국 정부는 에콰도르 대사관의 외교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국내외의 비난 역풍만 불러

일으켰다.

어산지의 ‘대사관 망명’ 생활이 1년이나 됐지만 해법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영국, 스웨덴, 에콰도르, 미국 등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인 국가가 4개국이나 되는 탓에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에콰도르 정부는 스웨덴 검찰이 런던 대사관으로 와서 어산지를 신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스웨덴은 이를 거부했다. 스웨덴 수사당국은 어산지에 대해 발부한 자국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영국은 어산지의 출국을 금지하고,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 밖으로 나오는 즉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대사관 주변에 경찰 병력을 24시간 대기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어산지가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을 벗어나 에콰도르로 향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산지가 이 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어산지는 10대 때부터 컴퓨터 해킹에 매료돼 동료들과 해커 그룹을 결성해 활동했다. 20세 때인 1991년 호주연방경찰에 체포된 그는 20여 건의 해킹 혐의를 시인하고, 벌금을 낸 뒤 풀려났다. 체포 당시 그의 컴퓨터는 모뎀을 통해 호주 대학과 캐나다 통신사, 각종 기관 등에 접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부터 프로그래머와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컴퓨터 전문가들을 위한 책을 쓰기도 한 어산지는 1999년에 처음으로 리크스(leaks.org) 도메인을 등록했지만 당시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2003년~2006년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 등을 공부한 어산지는 2006년 정부의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자

는 취지로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아이슬란드에 설립했다. 메인 서버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보장된 스웨덴에 뒀다.

위키리크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것은 2010년 4월, 미군 아파치 헬기가 2007년 이라크전에서 로이터(Reuters) 기자 2명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당시 어산지는 아이슬란드의 한 주택에서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각국 매체들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위키리크스는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전 기밀문서, 10월에는 이라크전 비밀 자료를 공개했고 11월 말 25만 건의 국무부 외교 문건을 폭로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겼다. 국무부 외교 문건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안은 물론 각국 지도자에 대한 평가와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관리들에 대한 사실상의 스파이 활동 지시 등 크고 작은 정보들이 모두 망라돼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전을 벌이는 와중에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다. 어산지가 8월 13일 세미나 참석차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발생한 일이 발단이 됐다. 어산지는 현지에서 2명의 20대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들로부터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스웨덴 검찰은 11월 18일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은 이에 근거해 어산지를 체포하라는 적색경보를 회원국들에 내렸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검찰이 당초 어산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자체적으로 기각한 뒤 다시 제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적을 피해 영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어산지는 12월 7일 영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어산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미 당국이 나라를 국가기밀 누설죄로 투옥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

라고 주장했다.



어산지가 인터폴 수배명단에 올려져 있다.
(출처 : The Daily Mail)

어산지는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12월 16일 지인들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스웨덴 송환에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그는 540여일간 보석 상태로 영국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2년 5월 30일 영국 대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어산지의 스웨덴 송환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재심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6월 14일 이마저 기각하자 어산지는 보석 규정을 어기고 노퍽 주의 주거지를 벗어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2010년 12월 7일 체포된 어산지(출처 : The Daily Mail)

어산지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에콰도르를 망명지로 택하고, 또 에콰도르가 이를 허용한 이유는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남미 반미 그룹에 속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어산지와 손을 잡을 경우 얻게 될 정치·외교적 이득을 노렸다. 대통령 3선을 앞두고 반미 좌파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언론 자유’와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라는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으려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 코레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어산지가 진행하는 러시아 국영방송의 토크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을 때 물밑 협상을 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돌았다.

어산지 역시 영국이 돌아선 마당에 모국인 호주 또한 자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 아래 반미 노선을 공유한 에콰도르로 발길을 돌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망명 신청 당시 에콰도르 대사관은 어산지가 코레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박해받고 있으며 호주도 정치범인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어산지 카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몰라도 지난 2월 3선에 성공한 코레아 대통령은 대선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산지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시급한 외교적 문제”라며 “그의 운명은 유럽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어산지는 대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이 기간에 딱 두 번 대중과 만났다. 에콰도르 정부가 망명 허용을 발표한 지 3일 뒤인 8월 19일 대사관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어산지는 수백 명의 지지자 앞에서 미국에 위키리크스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바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12월 20일 한 차례 더 대사관 발코니

에 등장해 지지를 호소하는 대중연설을 했다.

대사관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어산지의 활동은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팝스타 레이디 가가 같은 유명인의 방문을 받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는 화상 연설을 통해 오바마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CNN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도 지난 2월 어산지를 인터뷰해 방송했다. 어산지는 “힘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게 탐사보도”라며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정보기관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아이슬란드에서 나를 도와주던 18세 소년을 납치했다가 풀어줬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어떤 형태의 중화기를 썼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보도자료에서 “어산지를 처음 숨겨준 조력자를 인터뷰하다가 어렵게 어산지와 연락이 닿았다”면서 “오랜 도피 생활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언론 ‘더 네이션(The Nation)’은 지난 5월 8일 어산지를 인터뷰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사관 주변은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대사관 건물 진입로부터 출입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경찰관들이 곳곳에 배치됐고, 어산지의 침실과 마주한 빌딩의 창문에서도 감시자가 목격됐다. 어산지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 수많은 안테나를 장착하고 대사관 주변을 배회하는 경비 차량도 눈에 띄었다. 런던경찰국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대사관 주변 치안에 소요된 경비가 450만 달러(약 5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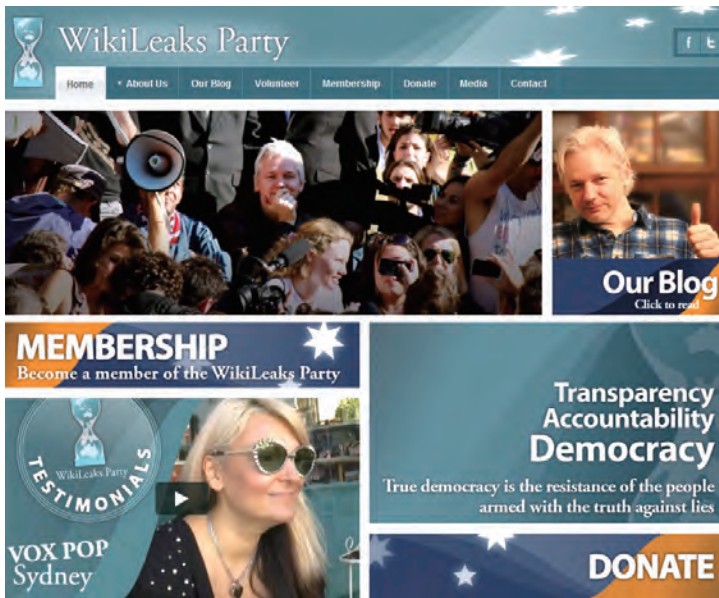
케이블과 컴퓨터 장치들로 어수선한 작업실에

서 에콰도르 전통 셔츠를 입고 인터뷰에 응한 어산지는 자연광을 쬌지 못한 탓에 창백한 얼굴빛이 었다. 그는 밤에 일하고, 오후에 잠을 잔다고 했다. 여러 대의 핸드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하루 17시간씩 세계 각지의 지인들과 소통한다. 그는 모든 대화를 암호화하고, 종이 서류는 전부 파쇄한다고 말했다. 한쪽 벽에는 트레드밀이 놓여있다. 그는 매일 5~8km를 달린다고 했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유연성을 기르는 체조와 복싱을 배우기도 한다.

어산지는 요즘 이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호주 상원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한 뉴스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오는 9월 24일 실시되는 호주 총선에서 위키리크스당을 창당해 상원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원의원에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산지는 인터뷰에서 “의원에 당선되면 영국 정부도 입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교착 상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법상 해외 거주 호주인도 출국한 지 3년 미만이고 6년 내 귀국할 의사가 있다면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어산지는 2010년 6월 출국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당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빅토리아 주에 3명의 후보를 출마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어산지는 빅토리아주 출마가 유력하다. 상원후보 등록은 8월 22일까지이며, 당선될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6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스웨덴에 송환될 경우 결국 미국으로 강제 송환돼 기밀 유출에 대한 보복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어산지의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 것일까. 미 정부는 “어산지가 스웨덴 송환의 진짜



호주의 위키리크스당 홈페이지

원인인 성범죄 의혹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의 폭로 이후 미 당국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묶아매기 위해 다각적으로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 며칠 전인 2010년 12월 1일 AP통신은 “미 법무부와 국방부, 국방부 소속 변호사들이 어산지를 포함한 위키리크스 운영자들을 간첩죄 혐의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죄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 중”이라며 “간첩죄가 어렵다면 국가재산 절도나 불법취득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어산지를 공적으로 몰아붙였다.

당시 백악관 대변인인 로버트 김스는 기자회견에서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면서 어산지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다이안 페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은 “어산지와 그의 조력자들을 간첩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법을 고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합동 서한을 연방당국에 보냈다. 마이크 허커비 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유출은 반역죄에 해당되며 어산지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FBI, 법무부, 군범죄수사국 등 십수 개의 정부 기구

가 대대적으로 위키리크스 수사에 나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호주 외교 전문에 따르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 정부의 수사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됐다. 위키리크스의 협력자와 지지자들은 시도때도없이 검문 검색을 당했고, 정보원으로 활동하라는 회유를 받았다. 위키리크스의 모든 후원 계좌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지난해 9월 5일, 어산지의 변호를 맡은 스페인의 인권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비밀 대배심’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산지를 겨냥한 수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경험상 기소는 하루 만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르손 판사는 위키리크스에 미 외교 전문을 건네 준 혐의로 체포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자들의 진술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외교 문건을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Bradley Manning) 일병(출처 : The Telegraph)

이쯤에서 매닝 일병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위키리크스 기밀 문서 폭로의 또다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매닝 일병은 2010년 5월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현지 군부대에서 간첩법 위반 등 22개 혐의로 체포됐다. 해커인 아드리안 라모와 채팅을 하면서 “한 달 전에 폭로된 민간인 사살 영상은 물론 이라크·아프간전 일지와 국무부 외교 문건을 이미 위키리크스에 넘겼다”고 털어놓은 직후였다. 해킹 사건으로 FBI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라모는 FBI에 이를 신고했다. 매닝은 미 버지니아주 판티코 군 구치소에 수감됐고, 기소인정 절차에 부쳐졌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재판 지연으로 재판 절차는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았다.

위키리크스나 어산지는 지금까지 정보제공자가 매닝임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매닝도 재판 전까지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월 28일 군사법정에서 매닝은 처음으로 기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겨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위키리크스에 자료들을 넘기기 전에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폴리틱코(Politico) 같은 미국 언론들과 접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제시한 자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뉴욕타임

스는 자료 제공 의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로 생각되는 인물과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을 상대한 사람이 어산지 본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닝은 자신이 인정한 혐의만으로도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적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다.

어산지는 매닝의 사례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매닝의 행위를 일탈 행위로 매도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신이상자의 짓거리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에 분노했다. 어산지는 “그가 한 행동은 매우 드문 사건이다. 영웅적인 행동엔 반드시 명확한 의도가 있다. 언론은 그의 성 정체성을 까발리거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파헤치는 대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대사관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지만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서 폭로로 인해 미국 정부가 감추고자 했던, 즉 전쟁에 희생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에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 언론들이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한 전쟁 선동자로서의 가면을 벗겨냈다는 점도 가치 있는 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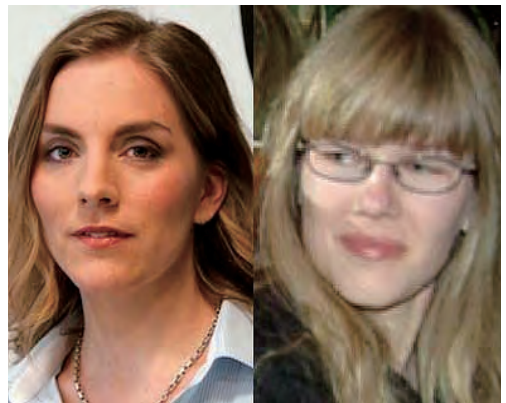
하지만 어산지에 대한 여론은 극단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비밀을 폭로한 그에게 ‘언론자유’의 수호자라는 찬사와 ‘잘난척하는 범죄자’라는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대사관 망명 생활이 길어지면 서 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어산지의 열렬한 후원자였던 영국 억만장자 언론인 제미마 칸은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위키리크스가 진실 은폐와 왜곡 등 공격 목표로 삼았던 정치권력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산지가 모든 법과 비판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서 “어산지가 내부의 정당한 소통 요구를 거부하고 극단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면 그동안 이룬 영웅적 평판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여했던 칸은 어산지가 비판적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데 실망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의 문서 폭로도 예전만큼 강한 파괴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4월 8일 1970년대 및 2000년대 미국의 외교·첩보활동에 관한 문서 195만 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이미 기밀이 해제된 자료들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전 폭로 때처럼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어산지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산지는 지난 5월 18일 스페인 TV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혐의가 모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 요원이 나눈 인터넷 메시지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9월에 이뤄진 첫 대화에서 요원은 다른 동료에게 어산지의 혐의가 정보기관에 의해 급조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화에서 “그들이 성 관련 혐의로 어산지를 체포하려 한다. 완전히 덮어씌우기다. 외교문건 폭로 직후라 시기적으로 너무 표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본부측은 “공식적인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감청 자료를 제공했으며, 자료 속 직원의 대화 내용은 기관의 정책이나 공식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어산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스웨덴 피해 여성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들은 5월 22일 자국 정부에 어산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언론에서 많은 영터러 억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정치적 음모로 봐서는 안된다”며 스웨덴 정부가 에콰도르를 압박해 어산지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산지를 고발한 성폭행 피해자 안나 아딘(Anna Ardin, 좌)과 소피아 윌렌(Sofia Wilén, 우)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

어산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신할 지는 알 수 없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 인권변호사는 5월 5일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은 더 머무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어산지의 다른 변호인인 마이클 래트너는 “미국은 어산지가 대사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숨을 고르고 있다”고 더 네이션에 밝혔다. 그는 “워싱턴은 어산지의 송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복잡한 시국이 해결되면 어산지를 데려갈 것”이며 이를 위해 대배심에서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에 재개되는 매닝의 군사 재판은 어산지의 운

wikileaks

명을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요원을 포함해 141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우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맞서 위키리크스와 일부 언론인들은 매닝의 군사 재판 과정을 공공사이트에 올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연방 법원에 냈다. 에콰도르 대사관은 지금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놓여있다.





중·한 인터넷 민족주의의 실태와 언론의 역할



글. 저우위보(周玉波)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장

지난 5월 7일 중국 언론계 차세대 지도자 30명이 위원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및 ADR에 관해 소개하는 한편 저우위보(周玉波)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장을 초청해 '중·한 양국간 분쟁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아래 기고문은 저우위보 지사장이 특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들어가며

중국의 인터넷 언론사인 환구망(環球網)은 2011년 12월 중국 네티즌을 상대로 '세계 각국에 대한 인상을 그리다'라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가운데 총 20만 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그 중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한류(韓流, 편집자 주 :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와 한류(寒流, 편집자 주 : 찬물이 흐르는 부분)가 공존한다'는 다소 냉랭한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17,702명의 네티즌은 한국에 대한 가장 깊은 인상으로 '역사표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자기 교만(7.3%)', '성형(6.6%)', '김치(6.1%)', '성격이 좀스럽다(6.1%)', '과격하다(5.6%)', '열등감(4.6%)', '민족주의(3.8%)' 등이 차례로 거론됐다.

중·한 양국은 육지로 연결된 나라가 아니지만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현실적 갈등이 다른 이웃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단오절이 중국 명절이나? 한국 명절이나?', '공자는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중·한 어

업 분쟁' 등 화제를 둘러싸고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불거지곤 했다. 이러한 온라인 논쟁 속에서 양국의 네티즌들은 이성을 잃어가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등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발언과 행동을 보인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활발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자랑하며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한 양국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필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간 중·한 양국 네티

존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점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는 언론이 무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 눈에 비친 한국

사례1 단오절, 굴원(屈原) 및 쫑쯔(粽子)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소식이 중국으로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다. “단오절은 우리의 유산인데 왜 한국에게 등재할 권리를 뺏겼냐?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굴원(屈原,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시인으로 《離騷》(이소)를 지음)이 만약 저승에서 알게 된다면 한국의 한강에 가서 투신자살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들이 구정을 쇠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특허사용료를 낼 게 뻔하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2005년 11월 26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거나 ‘중국 전통이 한국에게 도둑질 당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나’(2007년 12월 24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한 동안 네티즌들 사이에 번지는 혐한(嫌韓) 감정을 한층 더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알아보면 한국의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사뭇 다른 문화적 의

의를 지니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을 전후하여 약 50여 일 동안 국, 제사,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 등 다양한 민속 놀이와 기념행사가 벌어지는 대대적인 민속 축제이다. 이는 애국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해 단오 당일 날 쫑쯔(粽子, 종려나무 잎에 찹쌀과 대추 등을 넣어서 찐 중국 단오절 전통 음식) 먹기, 용선(Dragon boat)경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단오 풍습과 내용이 다르다. 더군다나 한국은 단오절이란 명절 자체가 아니라 단오를 지내는 일련의 향토적인 절차와 의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의 첫 마디인 “단오절은 원래 중국의 명절로 한국에 전래된 지 1,500여 년이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의 단오절을 도둑질했다”며 한국인을 혐오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이 단오제를 치르는 모습

사례2 팔달령 만리장성에서 낙서하는 한국인
웅장한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중국인들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12월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된 만리장성에 관한 사진 몇 장이 중국 네티즌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그것은 바

로 팔달령 만리장성의 케이블카에 도배된 한국어 낙서였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중국의 1호 명승지에 유독 한국어 낙서가 눈에 띄었다.

이 사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공중도덕 의식’을 맹비난했다. 이 와중에 ‘chuniz’라는 닉네임을 지닌 어느 한국인 네티즌이 게시판에 영어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에게 사과한다. 낙서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중국의 인터넷이 더 이상 한국인의 이러한 나쁜 이미지를 확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중국과 우정을 맺고 싶고 중·한 양국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만리장성 케이블카에 도배된 한국어 낙서

사례3 베이징올림픽 마찰

2008년 7월 베이징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중·한 네티즌 사이에 또 한 차례의 싸움이 불붙은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 SBS 방송사에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을 녹화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방송한 데서 비롯되

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의 많은 언론사가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격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한국 언론을 올림픽에서 축출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7월 31일, SBS의 한 관계자가 그들은 이미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식 사과했고 인터넷에 올린 관련 영상 자료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미디어 담당 관계자는 “개막식 리허설을 할 때 각 언론사들이 기기를 가지고 중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올림픽의 관례와 미디어들과의 묵인된 합의에 따라 사전에 외부로 관련 영상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SBS의 행동은 올림픽 시작 이래 처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박분경(朴芬慶)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상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자국의 혈통을 가진 유명 인사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문물의 리스트까지 정리했다. 그 리스트에는 중국 고대의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시(西施), 중국 고대 저명한 약학자인 이시진(李時珍), 농구 스타 야오밍, 마오쩌둥, 단오절은 한국에서 기원 됐다는 주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의 성명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상기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바 없을뿐더러 성균관대학교에 박분경이란 교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한국 네티즌 눈에 비친 중국

사례1 '대륙시리즈'

언제부턴가 한국의 인터넷에는 '대륙시리즈'라고 하는 '재미있고 독특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등장해 한국 네티즌들을 크게 웃겨 주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대륙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가거나 중국 현지에서 살면서 촬영한, 중국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뜻한다.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한국인이 접해 보지 못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중국의 모습을 위주로 촬영된 것이어서 한국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데는 충분하다. 특히 아직 중국을 직접 가보지 못한 한국인에게는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대륙시리즈가 지닌 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륙시리즈'가 과연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 한국보다 나은 점도 많은데 한국에 비해 낙후되거나 미개한 모습만을 골라서 보여주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확산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한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분명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쑨원은 한국인’ 루머에 연루된 중국의 한 뉴스 웹사이트

사례4 “쑨원은 한국인” 루머

2008년 7월 중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중국 민주혁명의 선구자인 쑨원(孫文)은 한국인이라는 한국 대학교수의 연구결과 때문이다. 중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한국 조선일보의 보

이로써 ‘쑨원은 한국인’이란 말은 중국 네티즌이 고의로 지어낸 사실무근인 루머였다는 사실이 세인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대륙시리즈



사례2 중 · 한 어업 분쟁

중국과 한국 간 어업 분쟁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한국의 인천해경 소속 이경호 경사가 단속 임무 수행 중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목숨을 잃었다. 그 외에 한국해경들이 소위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민들을 단속하다 제압에 실패하거나 칼, 낚, 해머 등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민들에 의해 중경상을 입은 사례도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어업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양국 네티즌들이 각종 댓글을 달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일례로 한국 인천 해경 피살 사건이 일어난 후,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고, 이를 접한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중국의 일반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어떻게 숨질 수 있냐”, “정당방위다” 등의 댓글을 달며 국수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어민들이 욕식을 부린 것”, “고의는 아니다” 등 반대성향의 글을 남기며 숨진 해경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불법 조업에 대

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성이 없는 중국인들의 심보는 대체 무엇인지”, “적반하장식의 댓글에 무척 화가 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황해(서해)에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소 겹쳐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놓고 아직 양국이 정식협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해경의 과잉단속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양국의 어업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민족주의에서 언론의 역할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은 비단 중국과 한국 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인터넷에 나타난 형태로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완벽하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여러 제한점이 따른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 상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만 고집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발언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보니 적지 않은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점과 국경을 초월하는 전파력,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연동, 각종 세력에 의한 이용이 용이함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여론을 잉태, 생성, 확산하는 중요한 원천과 근거지가 되고 있다. 특히 5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자랑하는 중국과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확보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생긴 인터넷 분쟁이 더욱 빈번해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를 요할 것은 언론이 뜻하지

않게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의 형성·범람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나열한 분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어느 정도 네티즌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고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건의 발전 과정 중 일부 무책임한 언론은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이목 집중, 방문자 수 제고 등)을 달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와중에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사건에 가담하여 부채질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을 가볍게 여겨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양국관계를 악화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건이 크게 번져 정치문제로 변신하게 된다면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민족주의 여론은 양국 간 외교협약의 정치문제 해결의 공간을 축소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과 사회의 안정에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 · 한 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분명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언론들은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민족주의 정서를 유발하기 쉬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국내외 관련 각 측의 관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성적 분석과 공정한 보도 및 논평을 해야 한다. 그 외에 독자들이나 네티즌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의혹을 해소하고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를 선동하는 언행을 비판해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글, 이영진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



‘잊혀질 권리’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

최근 한 언론매체에 ‘라면 상무, 폭언 사원도 잊혀질 권리는 있다!’라는 제호의 기사가 실려 관심 있게 읽어봤다.

위 기사의 내용인즉, 망각은 인류의 축복 중 하나로써 망각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잊고 새롭게 출발하며 고통스런 기억을 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 어딘가에 남겨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과거 SNS 기록은 물론 타인이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욕설이나 실수 등 굳이 들춰보고 싶지 않은 기록들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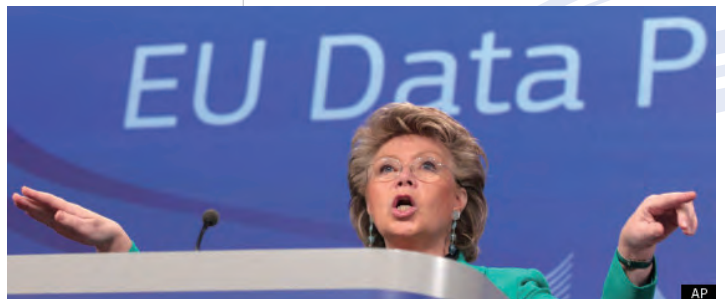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을 지적하면서 해당 당사자가 네티즌들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당사자 본인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가 과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남은 평생을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로 여론의 난도질을 당해야 하는지는 따져 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인터넷의 현실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나 통제권이 유명무실한 만큼 ‘잊혀질 권리’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

우리에게 아직 친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 함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 포털이나 SNS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나 사진,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는 영구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니기 마련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시글이나 사진 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한 퍼가기로 인해 그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이른다. 해당 게시글 등의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평생을 남의 입방아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고통에 놓이게 되고 또한 이른바 인터넷 상의 ‘신상 털기’ 등의 또 다른 피해에 시달릴 위험도 있다.

제발 이제는 좀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들춰지게 되는 고통은 아마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상처 부위의 염증이 가라앉을 무렵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격이라고나 할까. 현재와 같은 무한정보의 시대에 ‘알 권리’에 못지않게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일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Viviane Reding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출처: AP Photo)

유럽의 ‘잊혀질 권리’ 입법화 움직임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동 개정안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정보주체는 정보처리자에게 그 정

보를 유지할 합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및 추가적인 전파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위 개정안은 유럽연합 각국 대표들의 논의를 위하여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에 회부되었으며 만약 원안대로 채택이 된다면 그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 그렇게 되는 경우 세계에서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혀질 권리’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

한국의 ‘잊혀질 권리’ 도입 움직임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위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²⁾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연관검색어 서비스³⁾를 통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내 포털업체의 주장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관련 검색어의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일반인에 더해 연예인까지 연관 검색어 삭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연예인들의 강도 높은 삭제 요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일반인 및 연예인에 대해서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급변 조치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지침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1) 다만 동법 제5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이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2)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출범한 단체로서 국내 주요 포털업체가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3)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이상과 같이 ‘잊혀질 권리’는 이를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정보통제권에 포섭되는 권리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는 우리 법제에서도 수용 가능한 개념이고 사회적으로도 논의를 진행할 만한 수준에 이르는 개념인 것만은 사실인바 이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게시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포털업체의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이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 A는 지인의 소개로 B라는 여자를 만나 1년 간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A와 결별한 B는 그 직후 A와 A가 다니던 회사, B의 어머니인 C 등에게 여러 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살했다.

이후 C는 사망한 딸인 B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지난 1년 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올려놓았는데 그 게시물에는 A가 결혼을 약속하면서 B에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

하여 그 동안 B가 1차례의 유산과 2차례의 임신을 한 사실, 두 번째 임신 이후 A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B와의 연락을 두절한 사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C가 A와 만나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A의 뺨을 때리자 A는 C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C의 합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거부한 사실, B가 약물 복용으로 자살했고 사망 후 6일 만에 발견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위 글이 게시된 미니홈피에 방문자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A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면서 A의 실명,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올라왔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위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했다.

이에 A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폐쇄하고, 관련 댓글의 삭제 및 A와 관련한 검색 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관련 포털업체들에게 요구했으나 포털업체들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고, 포털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와 관련된 게시글과 A를 비난하는 댓글이 여전히 무수하게 남아 있자 A는 해당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에서 A가 승소하자 포털업체들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

응태도 등에 비추어,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업체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포털업체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3인의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서 “포털업체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 별개의견은 가장 완성된 참여적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기능, 인터넷 게시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견에 비해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로서의 포털업

체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의 경우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잊혀질 권리’는 반드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정보나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 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여자친구 혹은 이혼한 아내와의 사진이 유포되어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결혼을 앞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과거 애인의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검색되는 경우, 성형 이전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하며 특히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해 게시되거나 유포되어 본인이 이를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잊혀질 권리’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두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

필자가 중재위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청구인이 처음에는 정보도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다가도 결국에는 상대방인 언론사나 방송국이 문제가 된 기사나 사진을 삭제하거나 동영상 다시 보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경

힘하게 된다.

언론사 입장에서든 반론이나 정정 보도문의 게재 혹은 금전배상보다는 해당 기사 등의 삭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는 결국 조정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건 혹은 그렇지 않건 간에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이의 수용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 내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다만,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과의 충돌 문제, 공익적 기록의 삭제 문제, 디지털 유산(遺産)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게시물 처리 문제, 정보를 생성하지도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조치 의무 부과 타당성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잊혀질 권리’를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5월 2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를 통해 SNS에 한해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법제화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공공의 알 권리라는 두 상충하는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항권, 법과 권력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을 보고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게임
은 못한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방 청소나 숙제, 씻기 정
도의 기본적인 일을 하도록 정한 규칙이다. 규
칙을 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의 방은 엉망

이 됐다.

“규칙을 어겼으니 오늘부터 내일까지 게임
은 없다.”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리라. 내심 웃었다. 하
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들은 잠자는 시간

까지 쪼개가며 몰래 게임을 했다.

“이럴 수가!”

배신과 실망으로 나는 더욱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별로 ‘사흘간’ 게임금지를 선언했다. 내 앞에서 잘못을 벌던 아들은 나의 눈을 피해 여전히 게임을 했다. 다시 ‘일주일간’ 게임금지를 명령했지만 이제 아들에게 게임금지의 규칙 따위는 공허해진 느낌이 들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법정에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드물다. 법은 최후의 수단일 때가 많고,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다. 법의 한계 앞에서 더러는 ‘법에도 감정이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측가능하다. 적용할 법리나 판례를 찾아내고 주장할 사실들에 몰두하는 것이 일상이다. 몸에 배어서인지 집에서도 나는 법전처럼 뿔뿔한 아버지다. 적어도 열두 살이 된 아들 녀석에게는.

아빠노릇을 고민하는 사이 아들과 함께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았다. 원작의 작품성에 뮤지컬을 입혀 만든 이 영화는 대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아들 역시 재밌었는지 영화 속 음악을 곧잘 흥얼거렸다.

‘흠~ <레미제라블>이 좋겠군!’

법률가가 본 영화 이야기의 두 번째 텍스트는 2012년 연말에 개봉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법과 문화는 근대를 연 사람들의 싸움에 빚을 졌다. 시대와 공간은 다르



지만 그 시대 민중들이 고민하고 싸워나갔던 모습, 피 흘려 얻어낸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이 가진 모순까지 오늘날과 닮아있다. 그렇기에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고 법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법은 법전 속 깨알 같은 법조문의 딱딱한 얼굴이 전부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법률 조항의 작은 문구 하나를 얻기 위해 싸우고 목숨 바쳤는가! 법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목숨 바쳐 얻어낸 권리의 산물임을 상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는 법의 한계에서 법 감정을 고민하거나, 일상의 법리에 무료해져 정작 그 법리에 담긴 정신을 망각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공허해진 아들과의 규칙에 나름의 해결책까지 찾는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1815년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거대한 배 한 척이 쓰러져 있고 어두운 밤 폭우 속에서 수백 명의 죄수들이 그 배를 밧줄로 인양하고 있다. 뱃전에 꽃혔던 프랑스 깃발이 죄수들의 발아래 밟히고 있다. 분노에 찬 죄수들의 노래 소리 낮게 울려 퍼지고 그 속에 장발장이 있다.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그는 굶주린 조카들에게 주기 위해 가게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 그로 인한 형벌은 가혹했다. 장발장은 빵 한 덩이 훔친 대가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반복되는 탈옥 시도로 14년을 더 받아 배를 인양하는 중노동에 동원되어 폭우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혹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오히려 세상은 납득 못할 곳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훔친 것도 아닌데 5년씩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니!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않는 모순된 세상의 규칙 따위를 지켜야 할 이유를 그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장발장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야간에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물론 중간에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면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탈옥의 시도는 우리 법으로 보면 형법 제145조

의 도주죄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탈옥 시도가 반복되어 형량이 증가되어도 19년의 징역형은 당시 프랑스 법제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면 지나친 일이다.

“쓰러진 배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은 첫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Look down〉을 반복 재생하였다. ‘아래를 보라’는 말이었다. 죄수들에게 판 데 한 눈 팔며 도망갈 궁리하지 말고 일하라는 뜻으로 불렸으리라. 하지만 이 노래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프랑스 〈7월 혁명〉 과정에서 처참한 민중들의 삶을 보라는 의미로도 불려진다.

영화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26년 된 때부터 시작된다. 인권 선언으로 일반 시민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다. 헌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루이16세를 처형한 그들이었다.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폴레옹이 집권하였다. 나폴레옹은 왕과 봉건제도 하에서 프랑스의 혁명 과정을 주시하던 유럽에 자유주의를 알리고 변화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패각으로 영광은 오욕으로 돌아섰고 프랑스는 다시 왕이 지배하는 복고를 경험하게 되었다. 역사의 퇴보였다. 자랑이던 프랑스라는 배는 쓰러졌고 그들의 자존심은 오욕에 짓밟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일까?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이룬 혁명의 역사적 업적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봉건의 종말이자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혁명 헌법은 법률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왕과 귀족만이 가지던 권



리를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존엄하며 자유와 평등, 재산에 관
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가 권력은 국
민에게서 나오고 권력은 분립되어 서로 견제
하고 균형을 이룬다. 우리 헌법에 담고 있는 기
본권과 통치원리의 원형이 여기에서 비롯되었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이
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재산
권의 보장과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
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헌법상의 권리와 원
칙들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열매를 이어 받
은 것이다.

하지만 권리는 선언한다고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침
해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하고 그 권
리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해 법으로 규정되어
야 한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시대는 혁명으
로 선언된 시민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와 모순이 난무하여 여전히 혁명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권리는 아직 세금을 내
는 남성에게 국한되었고 그나마 소수에게 주어진
혜택에 불과했다. 대다수 일반 남성들과 여성,
어린이, 혹은 죄수의 권리는 말할 수 없이 비참
하였다. 영화에서 죄수 장발장, 여성 노동자 판
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코제트와 어린 시위대
원 가브로슈는 시대의 그늘에 놓인 권리를 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장발장은 가석방되지만 척박한 사회
는 죄수의 통행증을 가진 그에게 하룻밤 쉼 자
리조차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는 간신히 구
한 잠자리인 미리에르 신부의 집에서 다시 도
둑질을 하고 만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일이
지만 생존을 위해서, 혹은 19년간 억울한 옥살



이로 인한 분노에서 그의 행동은 그리 납득 못
할 일이 아니다.

죄수의 수형생활에서 인간의 존엄권이 침해
되는 문제와 전과자의 낙인문제는 정도의 차
이가 있어도 오늘날에도 문제가 된다. 전과자
라는 낙인은 여전히 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
아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
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
요하다지만 낙인의 문제와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든 인
간 존엄성의 원칙이 공허하지 않도록 할 의무
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나는 어떤 아빠인가? 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
고 있는 것일까?’

아들에 대한 나의 교육을 권리와 의무에 비
추어 곰곰 생각해본다. 아들의 입장이 되기에
는 여전히 뻣뻣하다.

“아버지, 자베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잘 이
해가 안가요.”

“그러게 말이다.”

아들에게 대답을 흘리며 나도 생각해 보았다.

‘아. 자베르. 어쩌면 나의 얼굴이 아닐까?’

자베르는 시장 마들렌이 신분을 속이고 살아 가는 가석방수 장발장이 아닐까 의심하며 오랜 시간 그를 추적하는 경찰관이다. 장발장의 입장에서 자베르는 자비를 모르는 추적자에 불과하겠지만, 법과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법의 집행자이다. 법은 약속이고 약속을 위반한 사람은 그 연유가 어찌되었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는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함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법과 집행자를 안전장치로 하여 믿고 유지된다. 그런 면에서 자베르는 훌륭한 경찰관이다. 그는 법과 자비가 양립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장발장의 자비에 자신의 신념이 훼손당하자 목숨마저 버린다. 법과 정의의 입장에서 그는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 주인공을 집요하게 쫓는다고 자베르를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법에 대

한 그의 신념과 실천이 숭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자베르라면 어떻게? 법에도 예외가 있고, 관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거치면서 자비의 여지도 함께 존재한다. 또 오늘 우리 법이라면 공소시효의 적용으로 장발장과 자베르 모두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 모든 절차에 있어 관용이 어렵고 여전히 법이 사람들의 법 감정에 반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요구로 봐야 한다. 법은 그러한 요구에 귀 기울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이상적인 법의 모습일 것이다.

‘아빠로서 나는 어떻게?’

물론 자베르에 가까운데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아빠는 아닐 것이다. 아이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한 없이 관용을 베푸는 미리에르 신부와 같기를 바라겠지? 그런 아빠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독립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아이의 코를 닦아주고 방을 치워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까? 아직 아빠로서의 고민과 갈등의 답을 찾지는 못하겠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아름답고 가없는 여인 판틴을 만나야 한다.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던 판틴은 다른 여인들의 모함을 받아 부당하게 쫓겨난다. 거리의 창녀가 된 판틴이 경찰관을 만났을 때 그녀는 법의 부당한 적용에 항변하기보다 ‘제겐 아이가 있어요.’라며 눈물로 자비를 요청한다. 노동자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수많은 판틴이 자비가 아닌 ‘권리’를 찾가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식적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채우고 나아가 생존권의 보장으로서 사회복지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

장발장은 죽은 판틴의 딸 코제트를 친 딸처럼 애지중지 기르고 성장한 코제트는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진다. 마리우스는 귀족집안의 아들이지만 민중의 삶과 혁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바리케이드에 남아 끝까지 저항한다. 장발장의 도움으



로 목숨을 구한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장발장의 죽음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바리케이트를 쌓고 끝까지 피흘리며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숙연했다.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은 법적 권리 그 이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법이 정한 장치로는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이 바로 저항권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저항권과 그로 인한 희생은 늘 존재해 왔다. 그것은 시민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법과 권력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보니 또 다른 역사의 원동력을 놓쳤다. 영화 속 법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고픈 이야기였는지 모른다. 그것은 '사랑'이다. 장발장의 판틴에 대한 연민, 코제트와 마리우스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자베르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또한 마리우스를 위해 희생한 에포닌의 사랑, 또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사랑도 영화 속 이야기로 법률 못지않게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영화나 원작자가 전하고자 한 것도 사랑과 법적 정의가 본래 하나였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모순을 겪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려 했는지 모른다.

나 역시 사랑과 규칙 사이에서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넌 내가 레미제라블 속에서 어떤 아빠였으

면 좋겠니?”

“장발장이요.”

아들은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자베르’같은 날더러 그가 가장 싫어한 장발장이 되라고? 코제트를 기르고 마리우스를 살려낸 장발장이 되어 달라고?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싶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 퇴근 후 험령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옆에 앉았다. 결눈질로 녀석의 게임기를 보며 물어보았다.

“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좀 가르쳐 줘봐.”



페리안드로스를 꿈꾸며

—서울법원 조정센터현장—



글. 황덕남
서울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상임조정위원회도 설치의 배경

신들의 왕 제우스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여신을 위하여’라고 새겨진 황금사과의 주인을 정해달라는 세 여신의 요청을 묵동으로 있던 왕자 파리스에게 미루었다. 파리스는 이를 받아들여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주었고, 그 대가로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헬레네를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이로 인한 트로이 전쟁으로 파리스의 조국 트로이는 폐허가 되었다.

위 전쟁 후 코린토스의 참주이며 철학자인 페리안드로스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술의 주인을 정하기 위하여 솔론, 탈레스, 비아스를 초청하였는데 이들은 황금술의 주인 자리를 서로 양보하다가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에 바치기로 하여 평화공존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건수는 1950년 약 63,000건이었는데, 2006년 약 126만 건으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위증기소자는 94명에서 1,858명으로 역시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페리안드로스의 흉상
(출처 : Wikipedia)

약 20배 증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OECD 27개 회원국의 평균 사회갈등지수가 0.44인데, 우리나라는 0.71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이며,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으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0% 증가하여 2002-2005년 GDP 기준으로 1인당 약 5천 달러의 증가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금사과 사건이 대전을 유발시킨 원인이 된 반면, 황금술 사건이 평화공존의 계기가 된 것은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현실을 이에 비추어 본다면,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2009년 상임조정위원회제도가 신설되었다.

상임조정위원 및 법원조정센터의 설치와 업무

2009. 2. 6.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직무를 수행할 법원을 지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하며, 해당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 4.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조정센터가 설치되고, 11명의 상임조정위원이 위촉되었으며, 2011. 4.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조정센터가 신설되고 추가로 6명의 상임조정위원이 위촉되었으며, 2013. 4. 서울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조정센터가 신설되고, 상임조정위원은 모두 29명으로 증원되었다.

상임조정위원은 법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상시적 조정절차 운영을 통한 조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된 법원의 민사조정신청사건 전부와 조정회부된 소송사건 중 조정담당판사가 상임조정위원에게 회부하는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조정사례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성립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재판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1〉

서울시내 모 의류상가에서 관리권을 둘러싸고甲과乙, 두 관리단 사이에 수년간 분쟁이 지속되었고, 관련된 소송에서 분쟁상대방의 적극적 항변 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판결들도 있게 되었다.甲관리단이 일정시기까지 상가관리를 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다가 관리권이乙관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누가 징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甲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약 200건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乙은 관리비는乙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각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한편,乙은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었다. 각 사건의 소가는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모든 사건에서 관리권의 귀속문제로 소송자료는 상당한 분량이 제출되어 있었다. 관리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첨예하고,甲 이외에는 입주자이나乙 모두 조정기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아니하여 당초 조정센터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각 사건의 규모와 전체 사건 수를 파악한 후 전체 상임조정위원의 중지를 모아 조정센터에서의 분쟁해결을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전체 상임조정위원이 여러 차례의 숙의를 거쳐 입주자들은 관리비 납부의사는 있으나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할지가 문제일 뿐이므로,甲과乙이 공동구좌를 만들어 관리비를 징수한 후甲과乙사이에서 그 귀속문제를 가지고 다투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甲과乙 모두 수용하여 공동구좌를 만들었고, 위 사건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구좌에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종결되었다. 후문에 의하면,甲과乙사이에서 수납된 관리비의 귀속에 관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사례 2〉

원고는 해외유학 후 귀국하여 유학기간동안 임대한 아파트를 인도받기를 희망하였는데, 임차인인 피고는 4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인도할 수 있다며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약 1년에 걸쳐 내용증명을 주고받다가 결국 원고가 아파트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제기 후 수개월 만에 위 사건은 조정센터에 회부되었다. 조정과정에서도 양측은 모두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보증금의 지급과 아파트의 인도는 동시이행이라는 간단한 판결이 선고될 사건이었으나 그 이행방법을 놓고 상호 신경전이 팽팽하였다. 양측의 논쟁이 상당시간 진행된 후 보증금 상당액을 임대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escrow(편집자 주 : 제3자에게 기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것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긍하였고,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의 10%는 선이행하겠다고 제시하여 양측의 분쟁은 기대 이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사례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의 자산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기업의 전체 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평가가치에 이견을 보이게 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러한 의견차이로 전체 거래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서울법원 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래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매도인이 해당부분이 반영된 주식인수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하였

고,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는 상임조정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3차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해당자산의 평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3인의 상임조정위원이 논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은 당초 합의한 대로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다.

상임조정위원의 역할과 기대효과

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분쟁의 배경 및 의도, 집행 등 분쟁과 관련된 여러 관점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입증방법에 관한 분석 등 분쟁에서의 입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쟁의 실상을 동영상으로 재현하지 못하는 한, 준비서면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분쟁당사자들은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입장을 직접 전하고 싶어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다. 따라서 심판을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아이엠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에서 생모를 가려내는 재판을 한 것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일천 번째



필자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포루스(Bosphorus) 대교를 보고 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를 드린 후 소원을 묻는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재판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 즉, 분쟁당사자들은 말하고 싶어 하고, 심판자는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이러한 상호작용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페리안드로스는 참주이지만, 코린토스의 번영을 이루었던 군주이기도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하는 것은 그 사회의 번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페리안드로스에 관하여 눈살 찌푸려지는 이야기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가 코린토스의 번영을 이루었던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남기지 않도록 한 그의 조정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하면서, 2010. 5.부터 2012. 4.까지 2년간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여 본 결과 약 40% 정도가 조정성공 또는 취하 등으로 종결되고, 재판부로 돌아간 사건들 중 약 1/3이 판결선고 전 조정·화해 또는 소취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결국 조정센터를 경유한 전체 사건 중 60% 이상이 판결을 선고받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 것이다. 조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로 표현해보고 상임조정위원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본 것이 당장 조정에는 실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실에서 분쟁에 처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페리안드로스의 조정력이 코린토스 번영의 초석이 되듯 우리사회 갈등 지수를 낮추고, 분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사회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으로 보는 언론사의 향후 과제



들어가며

네이버, '뉴스스탠드' 서비스 도입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com)는 올해 4월 1일부터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폐지하고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들의 개별 기사 제목을 네이버 첫 화면 중앙에 노출하는 뉴스서비스를 뜻한다. 이에 비해 뉴스스탠드는 언론사가 여러 개의 기사를 편집한 한 개 지면을 네이버 첫 화면 중앙에 노출하는 서비스 형태를 띤다.



글. 우병현
조선비즈 총괄이사

뉴스스탠드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 메인 페이지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시작하자 2009년 1월 뉴스캐스트를 도입한 후 4년여 유지됐던 국내 온라인 뉴스 서비스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먼저, 국내 언론사 뉴스 사이트의 트래픽이 공통적으로 60~70% 가량 떨어졌다. 반면 네이버뉴스 자체 서비스와 연합뉴스 온라인 이용량이 30~40% 가량 크게 증가했다. 언론사 사이트에서 떨어져 나간 뉴스 트래픽이 네이버 자체 뉴스 서비스와 연합뉴스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뉴스스탠드 도입은 단순히 트래픽 상황에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트래픽 급감이라는 악재를 맞은 언론사들은 트래픽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이른바 '네이버 인기 검색어 대응'이라는 임시방편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입했다.

검색어 대응이란 네이버가 첫 화면에 실시간으로 검색어 인기 순위를 공개하는데, 이 검색어를 보고 관련 기사를 급조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할 경우 네이버 사용자들이 인기 검색어를 검색할 때 해당 기사가 노출됨으로써 트래픽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는 거의 예외 없이 연예, 스포츠, 엽기적 사건 등 말초적 소재로 구성된다. 간혹 정치 사회의 핫 이슈가 검색어 인기 순위에 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락성 기사이거나 단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엽기적 소재들이 인기 검색어 유형에 속한다.

실제 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각 언론사 사이트에서 트래픽 상위권 기사 중에 저널리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색어 대응 기사가 매일 1~2개 이상 오르고 있다. 이들 기사는 기자 수업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 인력에 의해 생산

되고, 또 저작권을 위반한 기사이므로 기사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 언론사 스스로 검색어 대응 기사가 저널리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콘텐츠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폐지하고 대신 뉴스스탠드를 도입한 것은 뉴스캐스트가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기사가 인터넷 기사의 표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뉴스스탠드 역시 저급한 뉴스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촉발시키고 있다.

지금은 폐지된 뉴스캐스트 서비스 제공 당시의
네이버 메인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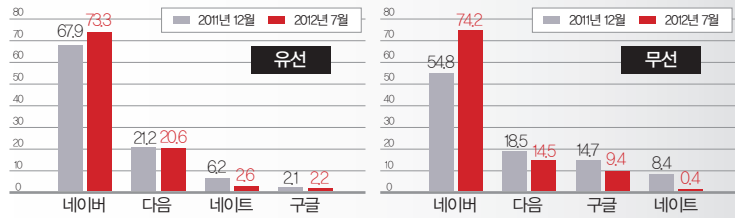
네이버 독과점의 문제

네이버가 명실상부하게 국내 인터넷 포털 1위에 올라선 것은 2005년부터다. 그로부터 네이버는 검색을 비롯해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이메일, 쇼핑 정보 등 인터넷 전 분야에 걸쳐 독과점 체제를 갖춘 뒤 현재까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는 유무선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다. 2005년부터 네이버의 유선분야 검색 점유율은 늘 70% 이상을 유지해왔다. 유선 인터넷 사용자 10명중 7명이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셈이다. 2009년 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무선 검색 점유율을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 말 기준으로 무선 검색 점유율도 70%를 넘었다. 이 점은 네이버가 유선에 이어 무선 인터넷에서도 검색 독과점을 구축해 장기 지배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2011년 ~ 2012년 인터넷 검색 점유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인터넷 검색 점유율 (단위: %)



시장 경제에서 독과점은 각종 산업과 사회적 피해를 낳는다. 먼저 소비자들은 독과점 체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재화를 얻기 어렵다. 또 독과점 시장에서 1등을 제외한 업체들은 자금, 연구개발,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독과점 구도를 깨뜨리지 못하고 1등 눈치만 보며 끌려간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결국 1등 기업만 배를 불리면서 막강한 자금과 브랜드를 지닌 공룡으로 변한다. 동시에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해당 산업계는 생태계의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새로운 혁신의 씨앗조차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 된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 독과점 역시 독과점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부작용들을 양산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들을 쇠퇴시키고 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시장을 보면, 네이버만 홀로 독주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업체들은 작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2012년 매출 2조 3,800여억 원에 영업이익률 29%를 달성했다. 이에 비해 같은 해 2위 다음은 4,534억 원, 3위 네이트는 1,972억 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1위와 나머지 업체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네이버의 독과점은 인터넷 포털 시장 이외 '온라인 골목상권'도 차례차례 무너트리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네이버가 1위 체제를 구축한 이후, 상품 가격 정보, 부동산 정보, 온라인 만화(웹툰) 등 주요 정보 시장들이 차례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네이버 독과점 체제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은 한글, 지식,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네이버 독과점 체제 아래에서 네이버 공간에는 낚시성 콘텐츠를 비롯해 저작권 위반 콘텐츠, 맞춤형과 어법이 잘못된 불량 콘텐츠 등 질 낮은 한글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 문화와 경제 수준

을 높이는데 필요한 고급 고등 지식과 고품질 문화 콘텐츠는 네이버에서 제대로 찾아 볼 수 없다. 네이버가 검색시장을 장악한 10여 년 동안 악화가 양화를 좇아냄으로써 빚어진 결과다. 아울러 네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인권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이じめ 등 온갖 사회적 부작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경악’, ‘알고 보니’, ‘충격’ 등 낚시성 제목을 단 콘텐츠로 가득 찬 ‘네이버 실록’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한류 콘텐츠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조선왕조실록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충실하고 정확한 기록은 미래 문명을 살피우는 콘텐츠의 토양이다. 현재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 저장 공간으로서 미래에 ‘실록’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수준은 참담하기만 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 언론계 현실

네이버의 독과점 체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산업 중 하나는 한국 언론 산업이다. 네이버는 2000년 5월부터 ‘네이버뉴스’라는 자체 뉴스 메뉴를 만들어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해 2005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뉴스 유통 플랫폼의 절대 강자로 자리를 잡았다. 네이버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뉴스스탠드에서 96개 매체, 네이버뉴스에서 100개 매체, 뉴스 검색제휴를 통해 200여 개 매체의 뉴스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강한 뉴스 유통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뉴스 사용자 10명 중 7명이 네이버를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한글 사용자들은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뉴스스탠드를 보거나, 네이버뉴스 메뉴를 이용해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40여 개 회사와 총인원 6,000여 명(자회사 포함)의 직원을 거느린 사이버공간 최대 대기업군으로 자리를 잡았다. 네이버는 이처럼 디지털 흐름을 잘 타면서 영향력, 자본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디지털 시대 최대의 미디어로 우뚝 선 것이다.

네이버가 10여 년 동안 국내 최고 뉴스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는 동안 국내 언론사는 기존 시장을 지속적으로 잃었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실패했다. 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해 디지털 시대의 낙오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HN 사옥 '그린팩토리'



2009년 10월 처음 출시된 매일경제의 모바일 뉴스앱(출처: 매일경제)



뉴욕타임스 디지털 유료화 안내 메일(출처: 뉴욕타임스)

먼저, 국내 언론사의 독자 또는 시청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아울러 수익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 오히려 인터넷에 기반한 신규 언론사들이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 크기가 고정된 파이를 서로 나눠 먹기 위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국내 언론사의 유선 인터넷에 대한 투자도 대부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내 언론계는 오프라인 이용자 및 광고 수익 감소에 대비해 나름대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사이트에서 투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올리면서 오프라인 매체에서 없어지는 수익을 보충하는데 실패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실패의 문턱에서 있다. 2009년부터 국내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자, 전 언론사들은 무선 뉴스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기대를 걸고 모바일 뉴스앱에 발 빠르게 투자를 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무선 뉴스시장마저 지배하면서 무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 언론사가 디지털 시대 마지막 탈출구로 삼고 있는 콘텐츠 유료화 흐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한 점이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등 해외 유수의 언론사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오프라인 뉴스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체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꾀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거두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성과는 10여 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 거둔 결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계는 10여 년 동안 네이버 검색제휴, 뉴스캐스트, 뉴스스탠드 등 네이버의 뉴스 정책에 끌려 다니느라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했다.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를 위해서는페이월(Pay Wall)과 같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차별성이 있는 자체 콘텐츠를 축적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언론사가 사전에 준비를 잘 했다고 해도 기존 시장과의 충돌(Cannibalization)이나 공짜 대체 뉴스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유료화가 쉽지 않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는 10여 년에 걸쳐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으면서 유료화를 일관되게 추진했기에 그나마 성공 사례에 오른 것이다.

국내 언론사들은 대부분 네이버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쓰면서 유료화에 필요한 기술과 콘텐츠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심지어 네이버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만 바라보느라,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모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네이버 독과점의 뿌리, 가두리 전략

일반적으로 네이버 독과점 체제는 검색엔진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네이버가 다음, 네이버 등 경쟁 업체에 비해 우수한 검색엔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검색을 선보임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을 끌어 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독과점 체제는 검색 경쟁력이 아닌 가두리 전략(Walled Garden Strategy)의 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두리 전략이란 사용자가 한번 사이트를 방문하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테면 대형 할인매장이 다양한 제품을 넓은 매장에 배치하고, 소비자 들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두리 전략이다. 또 할인매장은 푸드코트, 사진출력, 타이어교환 등 부가서비스까지 매장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할인매장에 일단 입장하면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돈을 쓰도록 가두리 전략을 잘 구사한다.

네이버는 가두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콘텐츠 내재화(In-house database), 큐레이팅(Curating), 서비스 폐쇄정책(Closed Service Policy), 토착화 전략(Localization Strategy) 등 세부 정책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행했다.

콘텐츠 내재화란 콘텐츠 원 생산자의 복제 콘텐츠(Duplicated Content)를 네이버 저장 창고에 쌓는 것을 뜻하고, 큐레이팅이란 사람(편집자)들을 투입해 복제 콘텐츠를 새로 자신들의 형식에 맞게 가공하는 것을 뜻한다.

폐쇄정책이란 자신들의 창고에 쌓은 콘텐츠를 제3자 검색엔진이 검색할 수 없도록 검색 로봇의 접속 활동을 막는 것을 뜻한다. 또 이메일을 제3의 이메일로 전달을 못하게 하거나, 외부 블로그와 연결을 막는 것도 폐쇄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다.

토착화 전략이란 한국 인터넷 생태계와 사용자 특성을 반영해 가장 한국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맞





네이버의 대표적인 서비스 '지식iN'

서는 것을 뜻한다. 해외 진출보다 철저하게 국내 시장을 장악하자는 현실적 선택이다.

네이버는 2003년까지 야후코리아, 다음 등 선발 업체에 뒤져 있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 자리에 올라섰다. 이는 2000년에 시작한 '네이버뉴스', 2002년에 도입한 '지식iN' 등 네이버식 가두리 전략이 한국의 네티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 통합검색 등 한국 네티즌 사용자들의 습성과 문화에 맞춘 토착화 서비스를 차례로 선보이면서 경쟁 기업들의 추격을 확실하게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심지어 싸이월드와 다음이 장악하고 있던 블로그와 커뮤니티 시장에도 네이버식 가두리 전략을 앞세우고 진출하여 단기간에 1위로 올라섰다.

또 토착화를 통해 세계 검색 시장을 평정한 구글이 한국에 진출한 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구글 검색 점유율을 한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이버식 가두리 전략의 출발점, 복제뉴스 서비스

네이버 리더들은 창업 초기부터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직관적으로 네이버를 찾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도록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쓸 만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네이버의 검색 로봇이 수집할 수 있는 한글 콘텐츠가 빈약했고 또 질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리더들은 우수한 검색용 콘텐츠로 뉴스를 주목했고, 언론사들을 설득해서 복제뉴스를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인 검색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검색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 리더들이 언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제뉴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복제뉴스가 가져올 가까운 미래의 재앙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언론사들이 별다른 위기감을 갖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고 복제뉴스를 실시간 네이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2000년 5월 복제뉴스를 모은 '네이버뉴스' 서비스를 개설했는데, 이 메뉴는 네이버식 콘텐츠 내재화 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

탄이었다. '네이버뉴스'는 편집자가 개별 언론사가 제공한 복제뉴스를 일일이 읽고 뉴스 이용자가 읽기 좋도록 편집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다.

네이버가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적용한 원칙은 첫째, 언론사에게 돈을 주고 복제뉴스를 구입한 것을 큐레이션 재료로 삼을 것, 둘째, 기자를 고용해 자체 뉴스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저널리즘과 거리를 유지할 것, 셋째, 사람을 반드시 투입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여과할 것 등 3가지 원칙이었다.

네이버가 이런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네이버뉴스'는 품질과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뉴스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람(편집자)이 실시간 개입하여 발생하는 뉴스를 묶어주고 보기 좋게 배치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인터넷 공간에 산재한 정보를 모아서 보여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정제된 콘텐츠스를 구매하고 인간적 요소를 통해 해결한 것이다.

네이버는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면서 다음, 야후코리아, 구글 등 경쟁 포털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 야후코리아는 복제뉴스 서비스를 토착화하는데 실패했었고, 다음은 복제뉴스 서비스보다 야고라 등 네티즌 참여형 서비스에 치중했었다. 구글은 뉴스정보를 검색 로봇이 수집하여 뉴스 이용자에게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중개 서비스에만 치중했다.

복제뉴스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는 네이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실제 복제뉴스 큐레이션을 통해 검색 요청이 늘어나고, 아울러 검색키워드 광고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복제뉴스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내재화의 매력을 맛본 네이버는 '네이버뉴스'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복제 콘텐츠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쌓는 일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네이버는 어학사전, 지식백과, 역사콘텐츠 등 다양한 기반 콘텐츠를 구입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놓고 네이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네이버는 콘텐츠 내재화를 통해 콘텐츠를 내부에 모으면 모을수록 검색 요청이 늘어나면서 검색 키워드 수익을 올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갔다.

네이버 생태계 식량원, 복제뉴스

네이버 리더들은 복제뉴스 서비스를 통해 검색 키워드 시장에서 성공을 거



네이버의 어학사전 및 지식백과 서비스

둔 이후 복제뉴스가 더 많은 곳에 쓸모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네이버는 우선, 복제뉴스는 네티즌들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동시에 네티즌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의 소재 역할을 하는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연예 뉴스의 경우 특정 연예인의 결혼설 기사가 복제뉴스 메뉴에 오르면, 네티즌들이 이를 다양한 곳에 퍼가면서 뉴스를 확산시키고, 뉴스의 댓글을 통해 논쟁이 모이거나 추가 정보가 생성된다. 아울러 네티즌들의 검색 수요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두 번째, 네이버는 정교한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사람들의 습관을 지배하는데 최적의 도구라는 점도 확인했다. 네이버뉴스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PC를 켜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네이버에 접속해 뉴스부터 클릭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뉴스라는 콘텐츠의 속성상, 매 초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온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틈이 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뉴스를 훑어보기 마련이다. 특히 속보성 사건이 터지면 뉴스 화면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네티즌들이 폭증한다.

네이버 리더들은 복제뉴스의 위와 같은 장점을 다른 서비스를 기획할 때 극적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다음과 싸이월드가 장악하고 있던 개인 미디어와 커뮤니티 시장에 진출할 때 네이버의 블로그와 카페가 복제뉴스 서비스와 잘 연계하도록 설계했다. 즉, '네이버뉴스'에서 뉴스를 보다가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바로 퍼갈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해 선두 주자와 차별화했다. 네이버는 영악하게도 통합 검색에서 같은 내용이라도 블로그와 카페를 검색목록 윗자리에 배치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네이버뉴스'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네이버 전체 트래픽의 5~6%에 불과하며, 뉴스를 통해 버는 광고수익도 미미하다고 해명한다. 오히려 뉴스콘텐츠 구매에 쓰는 돈이 매년 수백억 원대에 이르러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공급한 복제뉴스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늘 신선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네이버 생태계가 작동하고 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복제뉴스가 모두 사라진다면, 네이버 사용자들은 마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놓인 심정을 느낄 것이다. 복제뉴스가 사라지면 네이버에서 이메일,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정도만 쓸모가 있

을 것이다.

네이버식 가두리 전략의 전개과정을 제대로 분석하면, 위와 같이 네이버 독과점의 출발점이자 독과점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식량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제뉴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이버의 복제뉴스 서비스 보호전략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페이지

국내 언론사들이 네이버의 뉴스 유통 플랫폼 독과점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무렵이다. 이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 ‘탈 네이버 종속’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전개됐다.

예를 들어 10여개 신문사들이 함께 뉴스 콘텐츠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체 광고를 붙인 복제뉴스를 네이버에 공급하려고 시도했다. 또 몇몇 신문사들은 네이버 복제뉴스 제공을 중단하고 공동 뉴스 포털을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이밖에 네이버의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언론 기능 수행으로 보고, 언론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네이버도 언론계의 ‘탈 네이버 종속’ 움직임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네이버는 먼저 주요 신문사의 네이버 복제뉴스 제공 중단 움직임에 대해 언론사의 과거기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지원 사업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실제 3개 언론사가 네이버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탈 네이버 전선은 붕괴됐다.

네이버는 복제뉴스 큐레이션 기능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계의 비난에 대해서는 ‘뉴스캐스트’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변칙 뉴스 중개(Out-

link) 서비스로써 맞췄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기사를 고르고 제목을 달 수 있는 뉴스캐스트로 맞선 것이다.

뉴스캐스트가 낱시성 또는 선정적 기사 제목으로 인하여 도마 위에 오르자, 이번에는 뉴스스탠드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캐스트는 클릭 한번으로 해당 기사를 열고,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지면에 이어 해당 기사를 연속해서 클릭함으로써 해당 기사를 여는 것이 차이점일 뿐 같은 변칙 뉴스 중개서비스다.

겉보기에 네이버는 10여 년 동안 언론계와 늘 힘겨루기를 하면서 양보를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네이버의 뉴스 관련 핵심 전략은 늘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뉴스캐스트’, ‘뉴스스탠드’ 등을 언론계와의 상생 카드라고 주장했지만, 실재는 복제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반면 언론계는 네이버와의 협상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네이버가 제시한 카드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을 반복했다. 언론계와 네이버 간 전선이 처음 형성될 때는 서로 단합하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네이버가 카드를 들고 개별 언론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면, 전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곤 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모인 쥐들이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가 어느새 모두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양상과 같다. 네이버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지만, 설불리 혼자서 행동하다가는 개별차원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나설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언론계는 네이버 종속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 걸음은 네이버 독과점 체제의 시발점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언론계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 독과점 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공도 언론계 자신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즉, 언론계는 네이버의 복제뉴스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를 중단시키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네이버 독과점을 보는 3대 관점

올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

사에 나섰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상업 광고를 붙인 동영상 업체의 동영상을 네이버의 검색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을 조사해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를 수용하고 않고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네이버의 독과점은 검색 등 일부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검색 목록에서 특정업체 동영상을 뺀 것도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공정거래위는 또다시 규제 칼을 꺼내 들고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비롯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정부와 네이버가 독과점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네이버가 다시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누구나 골목상권 붕괴가 지닌 문제를 쉽게 이해해도, 네이버의 독과점이 온라인에서 일으키는 폐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김상헌 대표는 올 5월 한 강연회에 배포한 자료에서, “인터넷 시장은 동태적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대체 서비스 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당국이 개입할 경우 시장의 동태적 진화와 기업의 혁신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3월 11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초대석에 초청 연사로 나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NHN 김상헌 대표(관훈클럽 제공)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5년 전 규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네이버 독과점 구도의 디지털 경제적 특성을 잘 포착하고, 네이버 독과점이 일으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의 독과점 구도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슈를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

첫째, 독과점여부를 따지는 시장 획정을 할 때 네이버의 가두리 전략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이버 서비스는 가두리 전략과 그에 따르는 콘텐츠 내재화를 비롯해 큐레이션, 폐쇄, 토착화 등 세부 정책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네이버라는 유무선 플랫폼은 개별 콘텐츠와 서비스가 결합된, 단일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사용자를 이어주는, 전형적인 양면 시장 모델이다. 그런데 네이버는 가두리 전략을 통해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를 없애거나 무력화시킴으로써 폐쇄형 플랫폼(lock-in)을 구축하였다. 또 한글 콘텐츠를 내재화하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한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둘째, 검색 중립성(Search Neutrality)이라는 관점을 통해 네이버 독과점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검색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개념에서 차용한 것으로, 콘텐츠 생산자가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검색 결과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3의 서비스 사업의 자사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망을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제3의 사업자와 망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유 경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 검색 서비스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주는 정보 중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검색 서비스 업체들은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공짜로 개방하고 있다. 또 콘텐츠 생산업체가 스스로 정보를 막지 않는 한, 자신들의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 사용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는 10여 년 동안 복제뉴스를 비롯해 복제 콘텐츠를 내재화 하면서 검색 서비스를 제3의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는 내부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고, 검색 제휴를 맺은 제3자의 콘텐츠를 그 다음에 보여준다. 복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색 제휴를

맞지 않은 불특정 콘텐츠는 검색 목록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배치되며, 심지어 전혀 검색이 안 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 언론계가 처한 현실은 검색 중립성과 관련된 것이다. 언론사중 상당수는 네이버에 복제뉴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돈보다 영향력을 감안한 선택이다. 실제 국내 검색 수요의 70%를 장악한 네이버에서 자사 뉴스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뉴스 영향력은 급감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 차별화 정책에 대해 “검색을 이용해 자극적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를 유포시키는 업체들의 활동(검색 어뷰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네이버의 이런 입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다.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제2,3의 검색 서비스가 네이버 대체 역할을 못하는 비 경쟁시장에서 모든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네이버를 통한 노출에 목을 매달고 있다. ‘검색 어뷰징’ 현상은 네이버 검색 독과점의 부산일 뿐이다.

셋째, 복제 콘텐츠 생산자와 복제 콘텐츠 수집자간 비대칭(Asymmetry) 현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복제품은 품질 면에서 100% 동일하다. 따라서 생산자가 복제본을 수집자에게 넘기는 순간, 수집자는 생산자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수집자만이 복제본을 가공하거나 여러 복제본을 묶어 메타 콘텐츠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제본 수집자와 복제본 제공자간 힘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

10여 년 전 네이버가 복제뉴스를 시작할 무렵에는 국내 언론사가 네이버에 대해 ‘갑’노릇을 했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네이버가 복제뉴스를 큐레이팅하면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개별 언론사들을 압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뉴스 생산자와 복제 수집자간 이런 비대칭 구조는 수요 독점(Monopsony) 문제를 야기시킨다. 수요 독점이란 구매자가 한 곳 밖에 없는 시장을 뜻한다. 현재 국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은 사실상 네이버 밖에 없으므로 수요독점 시장에 가깝다. 2위 다음은 광고와 연계한 방식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3위 네이트는 사세 감소에 따라 뉴스 유료 구매를 접었다.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제 값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 국내 언론사들은 대부분 월 200만 원~1,000만 원 사이에 네이버에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모든 언론사의 기사 생산 원가에 턱없이 모자란다.

네이버 독과점 구도와 그것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네이버가 스스로 복제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폐쇄 정책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독과점의 근본 원인인 가두리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어 구글, 야후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 뛰어들어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네이버가 그런 전환을 스스로 못할 경우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1980년대 미국 정부는 AT&T 독점문제를 기업을 분할함으로써 해소했고,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어 끼워팔기 논란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 부분과 나머지 응용소프트웨어 부분 간 분리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런 사례를 참조하면, 네이버 독과점의 핵심인 검색 서비스 부분을 나머지 콘텐츠 및 서비스 부분과 떼내 별도 법인으로 만들도록 함으로써, 검색엔진의 독과점이 뉴스유통 등 다른 서비스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연예저널리즘,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 남재일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뉴미디어 환경과 연예저널리즘

뉴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뉴스 산업이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뉴스 생산과 유통의 분리이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분리가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 유통 조건의 변화는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포털과 휴대용 디지털 기기의 매체 속성에 맞는 뉴스란 쉽게 시선이 가고 쉽게 읽히는 뉴스다. 가장 값싸게 이런 뉴스를 공급하는 방법은 가벼운 소재를 선정적으로 가공하는 것. 결과적으로 뉴스 생산의 전략은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성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면, 저널리즘에 부과되던 공공성을 준수하는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윤리적 기반이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뉴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포털이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뉴스의 질적 하락은 이미 기정사실로 경험하고 있다. 낯 뜨거운 제목, 기본적인 정보도 누락된 부실한 스트레이트 기사, 최소한의 뉴스 가치가 있는지 의아한 수많은 연예기사들은 일상적인 저널리즘의 현실이 됐다. 선정성은 포털에 공급되는 모든 영역의 뉴스에 일반적으

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연예뉴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털이 뉴스 공급의 중심이 되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연예뉴스의 공급과 소비는 급격히 늘어났다. 뉴스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언론윤리 교육이나 기사작성 훈련이 안된 기자들이 급조해서 써내는 연예기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연예저널리즘의 위상

문제는 연예기사의 선정성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체 뉴스의 선정성을 연예뉴스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 방식이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편집 방식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기사가 제목만 한꺼번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제목을 클릭하게 하려면 일단 시선을 끌어야 하는데, 이 용도에 적합한 소재가 연예기사만한 것이 없다. 연예기사와 클릭 선점을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기사도 제목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제목들은 장기적으로 기자들의 뉴스 가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연예뉴스의 선정성은 다른 뉴스의 선정성을 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예저널리즘의 영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떠할까? 포털에 실린 연예기사의 댓글 중에 선정성을 비판하는 글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뉴스 소비자들이 이미 연예기사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전문잡지인 <신문과 방송>의 목차를 봐도 주기적으로 연예저널리즘의 선정성을 다룬다. <관훈저널>도 간간히 연예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비평을 실는다. 연예뉴스 생산자인 기자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영역에 비하면 빈도가 현저히 낮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학문적 연구는 더 심각하다. 연예저널리즘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은 거의 없다. 필자가 검색해본 바로는 2~3편 정도가 연예저널리즘 연구논문의 범주에 해당된다. 요약하면, 연예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많지만 기자들 내부의 비평과 학술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저널리즘 안에서 연예저널리즘의 위상

그렇다면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연예저널리즘을 저널리즘의 주변부로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연예와 연예인에 대한 유교적 통념이 여전히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뭔가 학술적으로 다루기 짝잡지 못하거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것 같은 일말의 불안감이 연구를 기피하는 요인이 아닐까? 또 언론인들은 과거 언론사에서 연예담당을 기자 본연의 일과는 거리가 먼, 회사를 위한 악역(?) 정도로 간주하던 직업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도 연예저널리즘은 아마 희망이 없을 것이다. 연예저널리즘의 담당자인 기자들과 비판자이고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제안자여야 할 연구자들의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교적 통념 속에서 연예인은 대중들 앞에서 웃음을 파는 광대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 연예인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부와 명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고, SNS가 등장하면서 '소셜테이너'가 출현하는데서 알 수 있듯,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다. 연예인 개인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보다 더 큰 함의가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의 중심에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연예인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성교육이 부재하는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정서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아도르노는 지금과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되는 1940년대에 이미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간파해서 대중가요를 비판하는 연구를 했고, 모렐도 비슷한 시기에 자본주의와 스타의 관계를 다룬 연구서를 내놓았다. 물론 1980년대 이후 대중문화와 연예인을 다룬 문화론적 연구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사정이 이렇다면 저널리즘도 마땅히 정론의 형태를 통해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연예저널리즘은 여전히 가십거리 위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연예저널리즘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은 학술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연예저널리즘은 지금까지 저널리즘 영역 안에서 저널리즘의 적자가 아닌 서자로 대우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기자들과 연구자들의 의식 속에서 연예저널리즘은 '서자저널리즘'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기사의 현주소

적자의 자리를 잃은 서자는 막 나가기 쉽다. 우리 연예저널리즘의 현주소도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영역 안에서 서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연예저널리즘은 포털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팽창을 했다. 하지만 그만큼 질적 하락의 정도도 심각하다. 포털에 들어가 연예뉴스를 훑어보면 이게 기사

이에 정준은 김병만에게 “이 정도면 상황이면 안 좋은 순위로 몇 위쯤 할까”라고 물었고 김병만은 “최하위”라고 답했다.

또한 김병만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와는 다르게 먹을 게 전혀 없지 않냐.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는 건 아닌가(생각 했다)”고 밝혔다.

예로 든 기사는 ‘리뷰기사’ 중에 양호한 편에 속한다.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병만의 인터뷰라는 취재가 덧붙여져 있다. 하지만 리뷰기사의 상당수는 프로그램 내용을 시간단위로 잘라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태를 띤다. “드라마 내용 같은 것을 10분 단위로 전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 기자들의 애기다. ‘리뷰기사’는 주로 기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근자가 남아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리뷰기사만 쓰는 아르바이트생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고 한다.

공항패션기사

공항패션기사는 스타들이 공항에 나타난 모습을 포착해 패션을 소개하는 기사이다. 스타들의 자연스런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 이 기사의 뉴스가치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스타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나타난 자연스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연출된 모습이다. 연출의 과정은 대략 이렇다. 패션회사에서 매니지먼트 회사로 제안을 해오면, 매니지먼트 회사는 제안 조건을 보고 해당 연예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통보된다. 해당 스타가 오늘 출국한다는 식으로. 기자들은 공항패션이 사전에 연출된 패션 마케팅 이벤트라는 사실을 알지만, 마치 자연스런 스타의 일상적인 한 모습인 것처럼 보도한다. 아래 기사를 보자.



스타들의 공항패션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배우 김성령이 공항에 나타났다. 20대도 울고 갈 몸매에 늘씬해(아만 입을 수 있다는 화이트 색상의 디스트로이드 진(찢어진 듯한 느낌의 바지)과 트렌치 코트 패션을 선보였다.

공항패션에서 빠질 수 없는 백(bag)은 미국 명품 ‘체투’의 캐롤새철을 선택했다. 이 가방은 리얼파이론 소재로 독특한 웨이프(착용하면 하트 모양으로 보임)와 스트러드 디테일이 특징이다. 가격은 660만원 대다.

자연스러운 내추럴, 러스트(오렌지), 옐로우 3가지 색상으로 나왔으며 체투 청담 본점과 새로수길 G533 편집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김성령 공

한패션 멋지다” “여배우 포스 작열” “김성령 가방 어디 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의 경우 공항패션에서 스폰서는 ‘체뚜’라는 명품 백 회사다. 가격과 구입처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고, 누리꾼들의 호의적 반응이 소개돼 있는데, 물론 이 반응은 기자가 허구로 갖다 붙인 것이다. 공항에 나간 김성령을, 보도가 안 된 시점에서 어떻게 누리꾼들이 보고 이런 반응을 하겠는가? 기본적인 시점 통일도 안 된 기사이다.



스타들의 ‘직찍’ 사진들
(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스타 직찍과 스타 트위터

‘스타 직찍’은 스타가 직접 셀프로 찍은 사진이라는 뜻이다. 연예기사의 한 유형이 된 ‘스타 직찍’도 스타의 가식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대개 이런 사진은 스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라온다. 물론 이런 사진은 대부분 스타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다. 홍보를 위해 연출된 것이다. 트위터에 스타가 한 말이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기획사가 연출한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면, 이효리가 “컴백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대목이 나온다. 홍보를 집중하는 시점이며, 홍보채널을 위한 방편으로 ‘스타 직찍’ 같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기사 유형들은 포털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온라인 연예매체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기사 유형들이다. 이 기사 유형들은 뉴스가치가 없거나, 연출된 사실을 숨기거나, 취재를 하지 않고 취재한 것처럼 쓰는 기사들이다.

가수 이효리가 그룹 신화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효리는 지난 24일 밤 신화의 6 멤버와 함께한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며 “오랜만에 만난 신화랑~ 우리 참 오래 한다 그치? 반갑다 신화야”, “하하하 그래 우리 이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활동 하나(자)”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오랜만에 음악방송을 다녀온 느낌.. 뭔가...음...에이 모르겠다..내일도 새벽 6시..자야겠다..bad night~”이라는 글로 오랜만의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효리는 지난 22일 Mnet ‘이효리 쇼(24-YORI SHOW)’를 통해 컴백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 유형들이 연예뉴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인터뷰한 기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포털에 실리

는 연예기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저널리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질 기사를 양산하는 온라인 매체가 전체 연예저널리즘의 방향을 끌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온라인 연예뉴스 매체가 전체 연예뉴스 생산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연예뉴스 생산과 유통의 구조

지금 현재 연예뉴스 생산을 결정하는 두 축은 포털과 연예기획사이다. 포털의 이해관계와 연예기획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연예뉴스 생산의 성격이 결정된다. 클릭수가 많으면서 기사를 전채료가 적은 기사를 찾는 포털과 홍보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기획사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사는 호의적인 선정적 기사이다. 재정이 취약한 온라인 연예매체는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기사를 되도록 많이 쓰고자 할 것이다. 이 삼자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것이 현재의 취재관행이다.

매체가 영세할수록 보도자료 의존율은 높다. 한 온라인 매체의 기자는 소속사의 기사 중에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공한 기사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평가했다. 거의 모든 현장 취재 스케줄도 연예기획사가 결정한다. 기자들이 먼저 현장취재를 원해도, 대부분은 거절된다. 연예인 인터뷰의 경우도 극히 소수의 영향력 있는 기자들이 아니면 개인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다. 이런 기자들의 경우는 평소 친분으로 연예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경우인데, 그 신뢰라는 것이 “전적으로 호의적인 논조”를 약속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연예매체별 영향력을 보면, 포털 등장 이전에는 스포츠신문과 유력일간지 기자들이 기획사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달라졌다. 한 일간지 연예기자는 현재 의 매체 영향력 순위를 ‘온라인 매체 전체-스포츠지-유력일간지 일부-기타일간지’로 서열화 했다.

“지금 종합일간지는 한마디로 찬밥입니다. 스타인터뷰를 하려면 좋은 면에 실어준다고 미리 언질을 주어도 잘 안돼요. 일간지에 실려 봤자 큰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온라인 매체들을 통하면 기획사가 원하는 논조대로, 포털을 통해서 훨씬 광범위하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기자는 현재의 연예뉴스는 기획사가 연출하고, 온라인 매체가 증폭시켜서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경로가 지배적인 경로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종합일간지도 이런 경향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일간지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미 연예저널리즘은



가십성 기사로 유명한 영국의 더 선

종합일간지 기자들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다. 취재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독자들에게 대한 영향력 모두 기획사-온라인 매체-포털로 이어지는 채널이 장악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예저널리즘은 개선될 소지가 없는 것인가?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외국 연예저널리즘의 사례와 국내에서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자.

대안적 연예저널리즘의 형태와 논리

서구 선진국의 경우는 상업적 매체와 정론지의 연예저널리즘 행태가 이원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은 가십성 위주의 뉴스를 중심으로 하는 ‘더 선’(The Sun)과 정론을 추구하는 ‘가디언’(Guardian)이 공존하고, 미국 역시 수많은 가십성 위주의 연예정보지가 있지만, 뉴욕타임스의 연예면에 해당하는 ‘아트’(Art)면은 논평 중심으로 편집되고 있다. 이 구도를 기준으로 우리 연예저널리즘을 보면, 종합일간지는 논평중심의 외국 정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십기사가 많고, 논평기사의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예가십을 중심으로 한 외국 대중지와 우리의 스포츠신문과 온라인 연예매체를 비교하면, 뉴스의 소재를 가십으로 특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기사의 깊이와 신뢰도 면에서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서 현재의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논리가 가능하다. 우선 논평중심의 대중문화 저널리즘과 가십중심의 연예저널리즘을 이원화 하고, 종합일간지는 전자에, 스포츠신문과 온라인 연예매체는 후자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는 논평중심의 종합일간지는 대중문화 현상을 가십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 징후가 드러나는 정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논평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스포츠신문과 온라인 연예매체는 가십을 다루되,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사실 검증의 절차를 보장하는 취재관행의 수립이 절실하다. 즉 소재선정은 가십을 하더라도 가공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현장에서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연예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대표적인 경우가 오마이뉴스의 연예팀인 ‘오마이스타’이다. 또 최근에는 ‘디스패치’가 연예저널리즘의 탐사보도를 표방하고 나왔다. 이들 각각이 추구하는 연예저널리즘의 논리와 성과를 살펴보자.



오마이스타 메인 페이지

오마이스타 : 연예저널리즘의 안티테제?

오마이스타는 2011년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가 만든 연예매체이다. 오마이스타는 팀장포함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창간취지는 현재 연예저널리즘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예뉴스를 만들자는 것. 오마이스타 기자가 생각하는 오마이스타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저희는 공황패션 같은 기사는 아예 안 써요. 실시간 리뷰기사도 안 쓰고, 의례적인 검색어 기사도 안 써요. 검색어 기사는 검색어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기사를 써요. 편집 방침은 연예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뉴스, 그리고 확인된 사실만 기사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 실명을 공개하고 가십기사 쓰는 걸 자제하고 있고요, 열애설, 결별설 같은 미확인 사실은 기사로 안 써요. 사실 확인이 된 시점에서만 보도하는 걸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 자살보도도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해요. 기획기사나 비평기사를 많이 쓰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자는 오마이스타의 정체성을 ‘연예매체이자 연예매체 비평매체’라고 정의했다. 타매체의 보도에 대한 비평기사들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오마이스타에 대한 연예기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선정성이 훨씬 덜하다는 것’, ‘추측보도가 없다는 것’, ‘기획기사가 많다는 것’ 등이었다. 필자가 오마이스타 지면을 살펴본 결과, 기사의 소재선정이나 기사 작성방식에서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나 내용은 타매체에 비해 한결 적었다. 또 비평기사와 기획기사가 많았다. 최근 여자친구의 자살로 구설에 오른 손호영의 자살시도를 다룬 아래 기사를 보면, 오마이스타의 보도 행태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가수 손호영(33)이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4시 36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인근 공용 주차장 안에 세워둔 카니발 차량에서 손호영이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하다 차량 밖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손호영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 불이 차량 내부로 옮겨 붙자 황급히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5분여 만에 모두 꺼졌으며 손호영은 현재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용산경찰서로 옮겨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손호영과 1년여 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의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손호영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23일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사인이 가스중독 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발인식은 23일 오후 1시에 치러졌으며, 손호영과 유족은 발인식에 참석한 이후 곧바로 장지로 이동했다.

손호영 자살시도는 종합일간지 사회면에서 크게 보도된 기사다. 연예전문 매체들은 자살사건 자체보다 주변인물의 반응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 사안 자체가 매우 선정적일 수 있는 데도 오마이스타의 보도는 일간지 보도 보다 더 건조하다. 자살동기와 관련된 일체의 추측이 없고, 주변에 떠도는 말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이 전혀 없다.

오마이스타가 한국 연예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짐작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선정성을 완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지적은 종합일간지 같은 편집방침이 현재의 온라인 연예매체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즉 어차피 연예뉴스는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선정성 완화만으로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인 매체가 ‘디스패치’이다.



디스패치 메인 페이지

‘디스패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디스패치는 스포츠서를 닮았의 기자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온라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디스패치가 다른 온라인 연예매체와 차별되는 것은 속칭 ‘파파라치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이다. 디스패치의 팀장은 ‘파파라치 저널리즘’이란 표현은 자신들의 취지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연예저널리즘의 탐사보도’라는 표현을 썼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타들의 사생활을 추적보도 하는 것, ‘킬러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디스패치 팀장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연예저널리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다루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스타들의 사생활이다. 사생활을 다루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 태도이다. 연예저널리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평적 리뷰를 하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사생활을 다루는 매체도 있어야 한다. 문제는 사생활을 다루되 사실 확인에 충실하고 법적인 문제를 잘 준수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디스패치가 추구하는 것은 가십을 주로 다루는 해외의 연예전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종합일간지 같은데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디스패치에 대한 연예기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연예저널리즘의 분업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긍정적 측면과 사생활침해의 어두운 측면 및 사회적 의미가 없는 기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공존했다. 양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소재 선정이 사생활 폭로라는 점은 큰 한계이지만, 이 한계 안에서 사실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하려는 시도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디스패치의 시도는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재 연예뉴스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연예저널리즘의 개선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종합일간지 기자들은 포털의 편집방침과 온라인 연예매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포털에서 저질 기사를 걸러주고, 온라인 연예매체 기자들이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기자들은 연예뉴스 생산과 유통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온라인 연예매체의 기사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포털 편집자는 포털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런 의견의 다양성은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변화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개선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예저널리즘이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라 대중들, 특히 청소년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연예저널리즘의 선정성이 저널리즘 전체의 선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연예영역은 저널리즘이 정론으로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계 내부의 공론화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학계의 관심이 무엇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런 조건위에서만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개선은 실질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가정 하에, 연예저널리즘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저널리즘 내부의 실천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털의 자정기능이 무엇보다 강화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예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 중심축은 기획사-온라인 연예매체-포털의 유통경로이다. 포털은 실질적인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 또한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은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포털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예뉴스 편집에 대해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연예매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것은 결국 매체이다. 연예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뉴스 생산자에 있다. 때문에 기존의 편집방침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편집방침을 설정하고 기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정의 방향은 선정성 완화, 사실 확인 절차 강화, 프라이버시 침해 완화 등 대체로 오마이스타가 지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자정이 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일간지의 경우 연예저널리즘을 대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종합일간지들은 연예저널리즘이 정치, 사회, 경제보다 주변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보도하는 행태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부 사건기사를 잘 쓰는 것보다, 정치부 정당의 갑론을박을 중계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 의미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의욕적으로 연예저널리즘의 정론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90년대 손쉬운 지면확장과 대중유인을 위해 연예저널리즘에 몰입했던 일간지들은 최근 들어 인력을 대폭 줄이고, 지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예저널리즘의 정론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매체는 현재로선 종합일간지 밖에 없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점진적으로 추구될 때 연예저널리즘의 정론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연예저널리즘은 버려져 망가지고 있는 '서자 저널리즘'에 불과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연예산업 홍보요원으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변화되고 있는 중국 언론의 북한 보도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자 혈맹 관계를 맺어온 중국에서 북한 관련 보도가 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문화·관광·교육 교류가 부쩍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투자·무역·관광 등을 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소식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의 3대 관영매체인 신화통신(新華通訊),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중앙TV(CCTV)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평양에 특파원을 두고 북한 현지의 생생한 뉴스를 늘려가고 있다. 이들 매체가 전하는 북한 관련 기사와 사실·칼럼은 전국의

기관지·상업지·전문지와 인터넷 포털 매체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다. 신문·방송·잡지의 웹사이트는 물론 대형 온라인 포털·검색 사이트인 바이두(百度)·텐센트(騰訊)·시나(新浪)의 국제·군사뉴스 코너에는 연일 여러 건의 북한 관련 기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탄탄한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북한 정보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나오는 북한 기사는 다른 나라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세계 각국은 중국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북한 관련 기사를 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매체의 대북 보도



중국 환구시보의 웹사이트
인 환구망이 마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뉴스 코너

는 북한 내부 상황 뿐 아니라 북·중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사의 주종 특파원들과 한국 공관 관계자들도 정보와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 항상 중국 매체들의 기사와 인터넷 매체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중국 주간지 환구인물
2013년 3월 6일자 표지에
게재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 사진

이처럼 중국 매체의 북한 관련 기사량은 늘고 있지만,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해 중국 독자는 물론 외국도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단편적이면서 북한 실상과 거리가 먼 기사들이 적지 않은 게 이유 중 하나다. 북한 당국 발표와 관영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다. 중국의 평양 주재 특파원들이 취재해 보도하는 기사는 범위와 심층적인 면에서

아직은 독자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 입장에서는 중국 매체의 보도만 접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힘들다.

특히 그 동안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보듯 가운데 하나는 북한 비판 기사다. 물론 원색적인 대북 비난 보도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두 나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판 보도는 소수에 그쳐 왔다. 이는 인위적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국의 보도 지침이나 검열·삭제와 같은 통제에 따른 결과다.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중국 언론계조차 '북한 때리기'는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라는 농담조의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중국 언론의 보도에서 북한 비판 금지라는 '불문율'에 균열이 잇따라 생겨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나타났던 대북 비판 보도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북한에 이어 올해 초 중국에서도 권력 교체가 이뤄져 새 지도자가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 내 대북 비판 보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언론매체들까지 북한 비판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국 내 관련 학자뿐 아니라 군부 인사들까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 비판 대열에 끼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반북(反北)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북한 실상을 외면한 기사를 비웃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북한 지도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글과 영상물도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중국 언론매체들의 북한 비판 보도는 아직 규모와 수위 면에서 미미한 편이지만, 앞으로 북·중 관계와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현상은 북·중 관계에 다시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의 대북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의 북한 비판 늘어

중국 언론매체들의 북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실험 실시·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있다. 역사·문화·



북한·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일과 달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핵문제가 갈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중국 외교부를 포함한 당·정·군과 관영매체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표현 하나하나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관계가 결끄러울 때도 북한을 자극할 만한 언사는 가급적 피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중국은 공식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한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북한을 향해 던진 매우 이례적인 강경한 언사여서 단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북·중 관계는 이를 계기로 소원해졌고, 중국 안에서도 반북(反北) 여론이 형성됐다. 그 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롯해 중국 어선 나포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매체의 대북 보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관영매체들을 중심으로 전례 없이 대북 강경론이 분출됐다. 기사 헤드라인과 본문에는 '북한과 동맹 관계가 아니다',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아도 돕지 말아야', '북한을 응징해야'라는 강경한 문구들이 들어갔다. 또 북한을 향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오랜 기간 끈끈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온 두 나라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던 언사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 비난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중국 매체는 환구시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출판하는 국제뉴스 분야 자매지로 1993년 창간된 뒤 199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환구시보는 중국의 국제사회 지위 급상승과 함께 국제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얻었다. 2009년 4월에는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를 창간하며 국제 사회를 향해 중국의 목소리 확산에 속도를 냈다. 이에 힘입어 환구시보의 발행부수도 창간 초기 3만 부에서 최근 최대 240만 부로 급증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내 언론매체 가운데 북한 비난 보도 횟수와 수위 면에서 단연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 주에도 수차례 북한을 비난하는 사실과 칼럼, 기사를 게재해 왔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를 비롯해 상업 매체, 인터넷 매체들도 환구시보의 북한 비난 사실과 기사들을 전재하며 퍼뜨리고 있다. 환구시보는 외국 언론매체

가 북한 및 북·중 관계 관련 뉴스를 전할 때 인용하는 중국 매체 가운데 신화통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환구시보가 다른 중국 매체에 비해 북한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뿐 아니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때론 북·중 관계의 파탄까지 거론해 가면서 북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의 북한 비판 사실과 칼럼은 내용만 떼어 놓고 본다면, 한국·미국 내 일부 보수 언론매체의 북한 비판 기사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중국 당국이 평소 보도 검열·통제를 하고 있는데다 환구시보가 인민일보에서 펴내는 자매지라는 점을 볼 때, 환구시보의 이 같은 대북 비난 보도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자매지인 환구시보

중국 전문가들 '북한 버려야' 주장

중국 내 한반도·국제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을 겨냥해 환구시보 못지않은 강한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관변 학자 또는 당·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이어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북한 관련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된 인물은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의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당위원(鄧聿文) 부편심

(副編審·부편집장). 그는 지난 2월 28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북한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들면서 '중국이 조만간 실패할 정권과 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적 관변 학자인 루자오(呂超)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4월 16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이 계속 꾸짖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위관(楊宇冠)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홍콩의 대공보(大公報)에 기고한 글에서 '중·북 우호조약을 놔두면 중국의 핵심 이익에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각각 중·북 우호조약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인, 반복 감정 고조...

누리꾼들 북한 성토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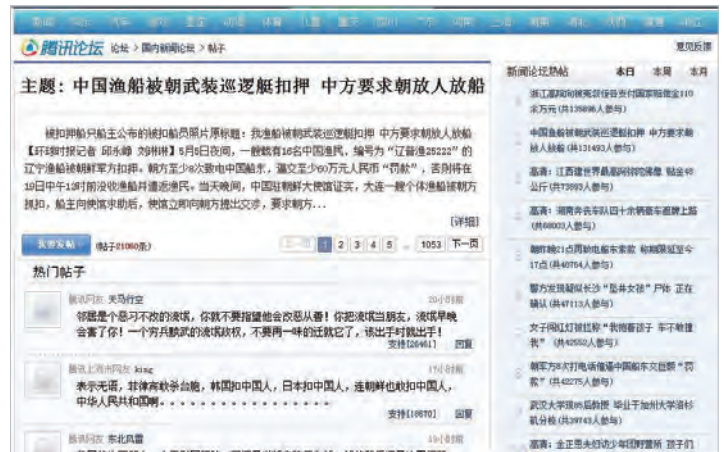
중국 온라인 공간은 누리꾼들의 북한 성토장이 됐다. 많은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만큼 반복 정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북한 관련 기사의 댓글 게시판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처 방식에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후 중국 내 대북 여론이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의 여론조사업체인 링덴(零點, HORIZON)이 지난 3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포함한 12개 대도시의 성인 1,1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4월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2%는 '군사적 행동을 취해서라도 북한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는 41.2%를 차지했다. 또 '핵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51.9%에 달했다.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 역시 과거보다 떨어졌다. 링덴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벌인 조사에서 북한은 줄곧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호감을 갖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61.4%를 기록, 한국의 70.5%보다 낮았다.

지난 5월 북한이 중국 어선(랴오푸위 2522호)을 억

류한 사건은 중국인들의 반복 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북·중 동맹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북·중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인터넷 포털 텅신의 관련 기사 게시판에서는 '북한이 야만적 방식으로 중국인을 괴롭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북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일이 있다면 곧바로 김씨의 3대 동생(중국인들이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비하할 때 쓰는 말)부터 처야 한다'는 격한 말들이 쏟아졌다.



중국 누리꾼, 북한 지도자 조롱 글·영상 올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 지도자들과 북한 정권을 조롱하는 다양한 패러디 영상도 내놓았다. 북한 지도자를 비판한 이들 동영상은 중국 당국에 의해 삭제됐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중국 누리꾼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권력 세습을 비웃는 풍자적 언어도 만들어 쓰고 있다. 누리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를 똥보나 돼지라는 뜻으로 '팡즈(胖子)'로 부른다. 세습이 본격화되면서 김일성은 '개국 똥보', 김정일은 '2대 똥보', 김정은은 '3대 똥보'라 부르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웃고 풍자하는 제품 광고도 등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국의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진산(金山, Kingsoft)은 자사의 새 웹브라우저 '리에바오'를 홍보하기 위해 김정은을 소재로 한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광고에서 김정은을 닮은 배우가 위성발사 카운트다운을 지켜보

5월 20일 포털사이트 텅신에 올린 북한의 중국 어선 억류 관련 뉴스

다가 발사 순간 웹브라우저가 다운되자 화를 내며 부하에게 충을 겨눈다. 부하가 재빨리 진산의 웹브라우저를 내려 받아 시스템을 정상 작동시키자 분위기는 반전된다. 이에 김정은은 웹브라우저 제품명 리에빠오를 담아 개사한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에 맞춰 여군들과 함께 말춤을 춘다. 진산은 이 광고에서 쉽게 흥분하는 성격으로 그려지는 김정은의 화도 풀만큼 자사 웹브라우저가 빠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닮은 배우가 진산 광고에서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말춤을 추고 있다.



누리꾼들은 웨이보와 바이두, 텡쉰 사이트 등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김태양', '얼팡'(二胖·둘째 똥둥이·김정일을 지칭), '똥보' 외에 중국에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자주 쓰는 속어인 '방즈(棒子·방망이·몽둥이)'나 '가오리(고려) 방즈'를 써서 부르며 원색적인 반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퍼지는 현상은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이 더 이상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국인들은 6·25전쟁 때 북한과 동맹을 과시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북한을 구시대적이고 낙후된 나라로 여기고 있다. 또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체면을 깎아 내리고 중국 발전에 이롭지 않은 장애물로 여기는 중국인들도 많다.

아울러 중국에서 전례 없이 북한 비판 보도와 반북 정서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북·중 관계 변화와 함께 중국 안에 쌓인 북한에 대한 불만도 자리 잡고 있다. '순망치한'의 혈맹관계였던 북·중 관계는 1992년 한·중 수교,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등을 거치며 소원했다가 일정한 냉각기를 지나 점차 복원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한 북·중 관계는 4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해 악화됐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 종결과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엇박자를 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중국 대선 나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인들의 반북 여론이 고조됐다. 관련 학자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일부 부처에서 '북한 경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 지 오래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북·중 관계는 이제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혈맹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게 중국 언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 수위 통제..

북한의 반발도 이유

보도 검열·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 북한 비판성 보도는 당국의 묵인이나 느슨한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정·이 대북 비난 보도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족쇄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라고 중국

언론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국이 북·중 관계 상황과 변화에 따라 보도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도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중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한계선'을 넘어서려는 보도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최근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난 2월 영국 파 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던 당위원 학습시보 부편집(副編輯·부편집장)은 직위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대북 정책에 맞춰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에 우호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북한의 새 지도자로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중국 신화통신·인민일보·CCTV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2011년 12월 19일부터 추도기간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초점을 맞춰 북한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관영매체들은 경결식 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정·군을 이끌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영도'해 나간다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했다.

중국의 지도자 그룹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후진타오 주석 집권 시절에는 9명)의 주요 동정이 관영매체에 소개되기는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처럼 외국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열흘 넘게 실시간으로 비중 있게 보도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중국 내 북한 비판 보도 확산될 가능성 주목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의 새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이 확산될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거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식량·에너지·경제 지원자인 중국의 북한 비판 확대는 양국 관계의 악화와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은 앞으로 무엇보다 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확산 또는 감소의 향방이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초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 회담에서 중국 쪽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까지 김 위원장을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쪽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 칼자루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쪽에 전한 이런 발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북한 쪽의 반응에 따라 북·중 관계가 악화될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중국 언론의 대북 비판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북한이 한국·미국은 물론 중국이 줄기차게 촉구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북·중 관계는 회복의 길로 돌아설 기회를 맞는다.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인이 해결 단계로 들어서는 만큼 중국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한 북한 비판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누리꾼을 비롯한 중국인의 반북 정서의 경우, 중국 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확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국제문제 전문가와 언론계에서는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실상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중국 언론과 국민들의 북한 비판은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최근 '북한을 포기하지는'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중국의 외교적 선택이 될 수 없고 중·북 관계가 파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쨌든 중국 언론의 북한 비판 확산 여부는 북·중은 물론 남북과 한·중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커다란 이슈인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반론·정정보도에 인색하지 않아야

독자 보호의 최일선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



글. 권태우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장
겸 고충처리인

chosun.com



朝鮮日報

스타 강사 김미경씨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기사가 나간 날 한 독자가 신문사를 찾아왔다. 그는 비닐봉지에 달걀 120개를 싸들고 왔다. 항의 표시로 신문사 간판에 던질 작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달걀 투척은 포기했지만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 “김미경씨는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박사 학위도 아니고 석사 논문 아닌가. 조선일보에도 석사·박사 많을 텐데 모두 완벽한지 궁금하다...”

지난 4월 2일 조선일보 김형기 논설위원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한다. 기사에 불만을 품고 신문사를 찾아온 독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내용은 그 며칠 전 독자서비스센터에 접수되어 편집국과 논설위원 전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조선일보 독자서비스센터(이하 ‘독자센터’)는 신문사로 들어오는 제보, 의견, 문의를 접수하는 창구이자, 보도에 대한 반응과 항의 등을 취합해 해당부서는 물론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전에는 편집국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접수하다 보니 바쁜 기자들이 독자 전화에 매달려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제보 전화가 담당부서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고 또한 독자들의 목소리를 신문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2002년부터 독자센터를 편집국에서 독립시켜 운영해 오고 있다. 기업체의 AS센터처럼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콜센터를 열어 놓고 있다. 접수 경로는 전화말고도 조선닷컴, 메일, 우편, 팩스 그리고 방문 상담 등이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과 ‘주폭(酒暴)’ 기획시리즈를 보도할 당시에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보 전화가 독자센터에 빗발쳤다. 이 내용들은 취재팀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상당수의 케이스가 기사에 반영된 바 있다. 최근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보도와 관련 “우리 아파트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취재해 달라”는 제보가 쏟아

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내용들은 ‘일일보고’ 형식으로 조선일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된다. 하루 단위로 독자들의 반응이 바로 피드백(Feedback)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 특히 독자들의 전화가 많은 사안의 경우 추후 제작에 참고가 되도록 그 의견을 상세히 첨부해 전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신문’으로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독자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이는 신문의 오타자·오류 지적, 보도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의견, 그리고 각종 제보와 기사와 관련된 문의 등으로 분류되고 접수번호가 매겨져 관리된다. 그 중에서도 오류지적의 경우 ‘바로잡습니다’ 등의 처리 결과도 독자에게 답신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항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반론이나 정정의 필요가 있다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고 있다. 처리가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해당 리스트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부서나 기자에게 무언의 압박인 셈인데, 5월말 현재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이다.

참고로 2012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독자센터에 접수된 의견과 항의는 각각 2,366건(월평균 197건), 62건(월평균 5건)이고, 기사 오류지적은 192건(월평균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별도로 구독 및 배달 관련 전화는 훨씬 많지만 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독자센터 독자의견 접수 현황

	2011년 1월~12월	2012년 1월~12월	2013년 4월말 현재
의견	1,685건(월평균 140건)	2,366건(월평균 197건)	558건(월평균 139건)
항의	99건(월평균 8건)	62건(월평균 5건)	62건(월평균 15건)
오류지적	297건(월평균 28건)	192건(월평균 16건)	49건(월평균 12건)

신속한 정정이 신문 신뢰도 높여

독자센터는 각종 소송이나 언론중재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규정했지만, 이미 훨씬 이전부터 독자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온 셈이다. 실제로 현재도 독자센터장이 ‘고충처리인’을 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신문이 쉬는 토요일 정오 무렵 독자센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오늘 아침 1면에 나온 사람은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이 아닙니다. 나는 사진에 나온 사람의 친구입니다.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담원은 일단 전화를 걸어온 독자를 통해 사진에 나온 남성의 연락처부터 확보했고, 이를 편집국 당직자에게 즉각 전달했다. 이에 취재팀 차원에서 재확인 작업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수사 경찰을 통해 고종석 본인에게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른바 ‘나주 성폭행범 사진’이 판사로 확인된 것이다. 사진 속의 인물이 범인과 꽤나 닮았다는 점은 범인 주변인 다수에게 확인 또 확인을 거쳤음에도 큰 오보를 낳았던 것이다. 마침 그날은 휴무일이어서 편집국에서는 우선 당일자 인터넷 조선닷컴에 ‘성폭행범 고종석 사진,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잘못된 사진 게재로 피해를 본 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잘못된 사진이 나가게 된 경위를 밝히고 당사자와 독자들에게 사과부터 했다. 이어 월요일자 1면에도 비중있게 사과 기사를 게재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시간 다툼을 하는 취재·제작 현장을 감안하면 숙명적으로 실수나 착오의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그렇지만 일단 오보임이 확인된 이후 조선일보가 편집국 지휘부부터 현장 취재진까지 사진 속 인물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대처한 과정은 하나의 전범(典範)으로 눈여겨 볼 만하다. 체계적인 제보 접수 및 전달·보고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즉각적인 정정과 사후조치 이후에도 ‘독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까지 보고했다. 이에 위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모습(조선일보 제공)

원회는 “차제에 조선일보에서 오보의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원칙을 성문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긴 하지만 편집의 기본 방침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식의 사후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오보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오보이기도 하다. 사후 조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도 신문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2012년 9월 회의)”이라고 주문했다.

위에서 보듯 조선일보에서 보도로 인한 독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다. 2002년 독자서비스센터와 함께 출범해 올해로 11년째이다. 현재 7선 의원 출신인 조순형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중소기업 대표, 교사, 문화인사 등 각계에서 10명의 위원들이 활약 중이다.

독자의 관점에서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회는 조선일보 내 자율 중재 및 심의 기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초기에는 몇 차례 자체 중재 심의도 있었으나, 제기되는 사안이 많지 않고, 또 중요한 사안은 당사자들이 조선일보 내 기구보다는 외부의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음은 안타깝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또 다른 중요 기능인 보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 매달 한 번 위원회를 열어 조선일보의 보도를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비판 내용은 가감 없이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며, 주요 내용을 간추려 매달 지면에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에는 “후보 지지율만 쫓는 ‘경마식 보도’ 지양해야”(2012년 10월 회의)

- “아파트 관리 비리” 확실히 파헤쳐 주거 문화 바뀌어야”(5월 회의)
- “빛에 갇힌 서민들” 해법 모색하는 구체적 접근법 돋보여”(4월 회의)
- “인터넷 ‘뉴시성 기사’ 度 지나쳐… 신문에서 문제 짚어 줘야”(3월 회의)
- “향판의 문제점 실증적 데이터로 추적 보도를”(2월 회의)
- “미담 기사는 ‘과장’하는 경향… 사생활 노출 주의할 필요”(1월 회의)

[illegible]

월 회의에서 '치매 아내와 자살' 기사를 1면에 과감하게 끌어내 보도한데 대해 “치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웠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 올해 4월부터 ‘치매,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집중 기획 시리즈로 발전하기도 했다.

비판·감시하는 언론에게 분쟁은 숙명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반론 혹은 정정 보도한 사례도 많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 지난 5월 7일자 사설 '안마업소만도 못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출동'에 대해 항의가 접수됐다. "사설에서 '출장 안마사 여성'이라고 했는데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법적으로 '안마사'라는 호칭은 시각장애인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안마사'가 아니고 '불법 마사지업체 여성'이다. 그런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안마사'라고 썼는가. 시각장애인으로서 기분이 나쁘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안마사'와 '불법 마사지업체 여성'을 혼용해서 잘못 쓰고 있는데 꼭 시정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적을 수용해 9일자에 "7일자 사설 내용 중 '안마 업소'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 '안마사'는 '스포츠 마사지사'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을 종합 2면에 실었다.

그밖에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면에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취재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언론의 존재이유는 비판과 감시다. 소송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알려왔습니다]

▲ 2013년 3월 19일자 A5면 '민주 김광진 이석기·김재연은 동지' 기사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동지'에 부족' 발언은 민주당 의원 간의 동지애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으며, 이·김 의원을 동지라고 칭한 것은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2012년 10월 12일자 A1면 '차, 인혁당 피해자·전태일 동료 등 선대위에 인선' 기사 중 "새누리당 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전태일 열사의 동료 김준웅씨가 포함됐다"는 내용은, 김씨가 전태일 열사 보신 당시 12세였고 전 열사와 함께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2011년 5월 16일자 A10면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 선 박원순 시장 "학교 폭력은 선생님 잘못"'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학교 폭력"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박 시장은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박 시장께 사과드립니다.

[독자에 답합니다]

▲ "2013년 3월 19일자 A6면 방한한 미국의 카터 부장관 관련 기사에서 '부장관'이란 표현이 이상하다. '차관'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라는 독자의 지적에 답변 드립니다. 미국 행정부의 직급 순서와 명칭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라면 장관(Secretary of State)-부장관(Deputy Secretary of State)-차관(Under Secretary)-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로운 활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길 소망해 본다.

이 때문이다. 소송을 없애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취재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다..."

2011년에 독자센터에서 최근 10년간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훈으로 삼을 만한 사안들을 묶어 펴낸 '소송, 줄일 수 있다'는 사내용 소책자의 머릿글이다. 물론 원칙을 지키기에는 취재 현장이 너무 복잡하고 마감시간은 늘 촉박하다. 그렇다고 원칙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확인 또 확인했나? 팩트는 정확한가? 반론은 충분한가? 익명 보도 원칙에 충실했나? 발표된 제보는 추가취재는 했나? 사생활·초상권 침해는 없나?"이다.

물론 법원 판단도 오락가락한다. 그렇더라도 판결을 참고하면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다시 말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나 권익 침해를 미연에 막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자들도 소송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고 특히 배상금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렇지만 대개 기사를 많이 쓰고 또 한 가지 팩트라도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기사를 쓰고자 하는 '능력 있고 부지런한 기자'들이 분쟁에도 많이 휘말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무조건 소송만 피하려고 '좋은 기사'를 못쓰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주면서 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정정보도문의 제목이 커지고 길어지고, 위치도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지정하는 등 전과 달라진 모습에 일선 기자들의 불만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언론 활성화' 보다 '피해구제'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활성화가 전체 언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면을 빌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창달과 언론



공정한 언론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의 접수상담원은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해결에 관한 종합적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명예 침해사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합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의 편향을 설치하여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 ADR 교육과정 및 언론피해 예방·구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출장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DR 전문 교육과정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조정·중재 실무, 설득·협상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언론피해구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조정·중재사례 및 법원판례 등 언론보도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중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상 :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기업, 언론인, 대학(원)생 등

비용 : 무료

문의 : ADR 전문 교육과정 ☎02)397-3092~4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 교육

☎02)397-3062~4

